

# 일제시기 충남 부여·논산군의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

지 수 결

1. 머리말
2. 연구사 정리 및 문제 제기
3.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의 형성
  - 1) 유지집단의 개념과 범주
  - 2)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의 분화
4.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의 정치활동
  - 1) 농민운동과 소작쟁의
  - 2) 민원·진정 활동
  - 3) 사상선도 활동
5. 해방공간의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
  - 1) 유지집단과 우익정치활동
  - 2) 혁신청년집단과 좌익정치활동
6. 맺음말

## 1. 머리말

그동안 필자는 일제하의 지방정치사를 사례연구하는 과정에서, ‘관료-유지 지배체제’, ‘유지집단’, ‘혁신청년집단’ 등의 용어를 자주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일제시기 서산지역의 ‘관료-유지 지배체제’,<sup>1)</sup> 공주지역 유지집단의 도청이전 반대운동,<sup>2)</sup> 전남 순천지역 농민운동(소작쟁의),<sup>3)</sup> 읍 단위 일본인 사회의 지방정치(민원·진정활동),<sup>4)</sup> 개별 유지들의 유지기반과 유지정치,<sup>5)</sup> 근대 이행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05-A00012)”

1) 줄고, 1998 『日帝下 忠南 瑞山郡의 ‘官僚-有志 支配體制’ —『瑞山郡誌』(1927)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소 편, 『역사문제연구』3.  
2) 줄고, 1996 『日帝下 公州地域 有志集團의 道廳移轉 反對運動』, 『역사와 현실』20호.  
3) 줄고, 1997 『日帝下 全南 順天地域의 小作人組合運動과 ‘官僚-有志 支配體制’』, 『韓國史研究』96호.

기 지방 유지집단의 사회이동 양상 등에 대한 연구<sup>6)</sup>가 그것이다. 필자가 위 연구에서 활용한 용어들은 일제하에서 전개된 각종 정치적 사건이나 현상의 역사적 의미를 '사건사적'인 관점<sup>7)</sup>에서 재구성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적 개념'<sup>8)</sup>이다.

위의 연구들이 발표된 이후 필자가 활용한 여러 개념들의 유용성이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간간히 진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 개념, 또는 양 집단의 정치사회적 기능이나 역할 등에 관한 비판들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충남 부여군과 논산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의 분화과정과 존재양태, 그리고 양 집단의 차이나 政治的

- 4) 줄고, 2005 「日帝時期の在朝鮮(邑單位)日本人社會と朝鮮の'地方自治' —忠清南道公州·大田·鳥致院の事例を中心に」, 宮嶋博史·金容徳 編, 『近代交流史と相互認識Ⅱ 一日帝支配期』, 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會.
- 5) 줄고, 1996 「日帝下 公州地域 有志集團 研究 — 사례1: 徐惠淳(1892-1969)의 '有志基盤'과 '有志政治」, 『역사와 역사교육』 창간호 ; 1997 「日帝下 公州地域 有志集團 研究 — 사례2: 金甲淳(1972-1960)의 '有志基盤'과 '有志政治」, 于松趙東杰先生停年紀念論叢刊行委員會 編, 『韓國民族運動史研究』 ; 1997 「日帝下 公州地域 有志集團 研究 — 사례3: 池憲正(1890-1950)의 '有志基盤'과 '有志政治」, 『역사와 역사교육』2호 ; 1996 「日帝下 忠南 鳥致院 有志, 孟義燮(1890- ?)의 '유지기반'과 '유지정치」, 『역사와 역사교육』3·4합집.
- 6) 줄고, 1999 「舊韓末·日帝 初期 有志集團의 形成과 鄉吏 —충남 공주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韓國 近代 移行期 中人 研究』, 신서원: 2001 「近代 移行期 慶南 咸安地域의 社會移動 樣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17집.
- 7) 마르크스는 프랑스 혁명사를 서술하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발생하는 여러 사건이나 현상을 해당 사회의 물질적 토대(구조)와 연관시켜 그 의미를 분석 고찰하는 '構造史的인 接近方法'과 더불어, 여러 사건이나 현상을 늘 유동하는 당시의 정치 지형이나 정세와 연관시켜 그 의미를 추적 고찰하는 '事件史的인 接近方法'을 병행하여 활용했다고 한다. 마르크스 지음, 임지현·이종훈 옮김, 1991 『프랑스혁명사 3부작』 소나무출판사, 「개정판을 내면서」 참조.
- 8) △ 군면 단위 '官僚-有志 支配體制'란 총독부가 각종 '官僚機構'와 '公職機構(자치 및 자문기구, 공공조합 및 단체)'를 총동원하여 구축한 지방(농촌)지배의 '組織이나 制度', 혹은 그 '機制나 樣式' △ '有志集團'이란 총독부의 지방지배 과정에서 형성된 '總督政治의 媒介集團'으로서 '財産(토지재산)'과 '社會活動 能力(공직수행 능력, 일본어 구사능력)', '當局 信用'(공직 활동 경력)과 '社會 人望'(민원해결 역량)을 고루 갖춘 지방사회의 有力者集團(조선인, 일본인 포함) △ '革新青年集團'이란 1920년대 중반 이른바 '青年會 革新運動' 과정에서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지역사회운동(농민·노동·청년운동)의 주도집단을 말한다.

界線을 드러냄으로써, 앞서 언급한 개념들의 적절성을 재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제1장에서는 연구사 정리와 문제 제기를, 그리고 제2장에서는 부여·논산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의 형성문제를, 제3장에서는 소작쟁의와 조직 농민운동, 민원·진정활동, 사상선도활동 등의 전개과정에서 드러난 양 집단의 정치적 계성문제를, 그리고 제4장에서는 해방공간에서 전개된 양 집단의 정치활동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시기 충남지역은 지역사회운동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이었으므로,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의 정치적 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났던 지역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논산지역을 검토 대상으로 삼은 것은, 최근 해당지역의 市郡誌<sup>9)</sup>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양 집단의 정치사회적 구성이나 역할, '관료-유지 지배체제'의 존재양태나 작동방식, 소작쟁의나 농민운동, 민원·진정사건 등을 두루 조사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자주 활용한 △ 유지집단 관련 자료는 『忠淸南道道勢一斑』 각년판(1928년판, 1933년판, 1935년판, 1936년판, 1937년판, 1938년판) △ 혁신청년집단 관련 자료는 신문자료와 『忠南道下의思想概況竝同道論山·夫餘·靑陽·禮山及唐津郡各思想善導機關의活動狀況』[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思想彙報』 第9號 (昭和十一年 十二月)] △ 해방 후 정치활동 관련 자료는 『忠南地域特別調査報告書』(1945. 3)<sup>10)</sup> 등이다. 끝으로 필자가 집필한 시군지의 서술내용은 해당 지역 출신의 향토사 연구자나 시군지 편찬위원회의 감수를 거친 것임을 밝혀둔다.

- 9) ① 1998 『한국 근현대사와 서산지역』, 서산시지편찬위원회 편, 『서산의 역사(서산시지 제2권)』, 183-276면 ② 1999 『한국의 근대와 공주사람들 —한말·일제시기 공주의 근대도시 발달사』, 공주문화원, 1-406면 ③ 2002 『개화기·한말의 공주』, 『일제하의 공주』, 『해방 공간의 공주』, 공주시지편찬위원회, 『公州市誌』, 455-580면 ④ 2003 『개화기 한말의 부여』, 『일제 통치하의 부여』, 『해방공간의 부여』, 부여군지편찬위원회, 『부여의 역사』, 205-274면 ⑤ 2005 『일제하의 논산』, 『해방공간의 논산』, 논산시지편찬위원회, 『논산의 역사』(발간 예정) 참조.
- 10)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 1996 『美軍CIC情報報告書(Ⅰ)』 所收. 해방 직후 시기 신익희는 임정내무부장의 직위를 활용하여 정치위원회, 정치공작대, 행정연구위원회 등을 창설하였다. 위 보고서를 작성한 정치공작대는 집행기관으로 중앙본부-도본부-군본부-면연락부-리동연락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도진순, 1997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서울대학교출판부, 105-106면 참조.

## 2. 연구사 정리 및 문제 제기

### 1) 유지집단의 개념

유지집단의 개념이나 구성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정리하면, 하나는 유지집단을 구래의 명망가층이나 사족층(향리층을 포함한 지방엘리트, 혹은 한문엘리트층)을 잇는 사회계층으로 파악하는 견해, 다른 하나는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을 구분하지 않은 채 모든 농촌사회 내 유력자 일반(농촌엘리트)을 유지범주에 포괄하는 견해 등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김익한<sup>11)</sup>은, 농촌사회의 유력자를 ‘지역 명망가층’(구래의 양반 지주 출신)과 ‘신흥 유력자층’(향리 출신의 신흥 유력자)으로 구분한 뒤, 양자가 지방정치 과정에서 서로 다른 정치사회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이해한 바 있으며, 松本武祝<sup>12)</sup>도 김익한의 견해를 수용하는 가운데 ‘地方有志’를 19세기 饒戶層(富農, 庶民地主)을 잇는 在村中小地主層으로 그 개념을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韓相九<sup>13)</sup>와 鄭然泰<sup>14)</sup> 등은 일제하의 지방유지(혹은 유력자, 명망가)를, “글자 그대로 ‘뜻이 있거나, 힘이

- 
- 11) 金翼漢, 1996 『植民地朝鮮における地方支配體制の構築過程と農村社會變動』, 東京大學校大學院人文社會系研究科東アジア歴史社會専門分野 博士學位論文.
  - 12) 松本武祝, 1998 『植民地權力と朝鮮農民』 社會評論社. 松本에 따르면 ‘지방유지’란, “(19세기 — 필자) 饒戶처럼 대외적(국가권력 외의 不在地主와 市場)으로 지역의 이해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지역의 질서유지 및 구성원의 후생의 유지·향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한 계층”이었으며, 촌락 단위에서 이같은 ‘지방유지의 역할’을 담당한 것은 ‘재촌 중소지주’들이었다고 한다(위의 책, 26면).
  - 13) 한상구는 2002 『일제시기 지역사회의 ‘二重權威構造’에 대한 연구 시론(역사문제연구소 월례발표회 발표문)』(미발표 원고)에서, “일제시기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는 ①총독부 권력 ② ‘지역유지’ ③ ‘지역주민’이라는 세 가지 주체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총독부를 한 축으로 하고, 다시 지역 단위(혹은 전국 단위) 조선인 사회를 한 축으로 하는 二重의인 權威構造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14) 鄭然泰, 2003 『조선말 일제하 자산가형 지방유지의 성장추구와 이해관계의 증층성』 『한국문화』31 : 2005 『日帝의地域支配・開發と植民地的近代性 — 浦口商業都市江景地域の事例』, 宮嶋博史・金容德 編, 『近代交流史と相互認識Ⅱ 一日帝支配期』 慶應義塾大學出版會 참조.

있거나 명망이 있는 사람'(근대적 개발과 계몽의 주체)"이라 규정하면서, 필자가 제안한 개념 자체의 적실성은 물론이고, 분석틀로서의 유용성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15)</sup> 정연태에 따르면, 강경지역의 자산가형 유지들은 일본인 유지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행정기관 유지', '도시환경개선' 등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명망을 얻기 위해 '교육계몽운동', 심지어는 '지역사회운동'까지도 주도(후원)하였다는 것이다.<sup>16)</sup> 이런 견해는 板垣龍太<sup>17)</sup>의 사례연구에서도 지지되었는데, 板垣은 상주지역의 사례를 근거로, 필자가 유지 범주와 구성을 지나치게 'legitimate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비판하면서, 유지 개념을 "특정한 지역사업 과정에서 temporal하게 형성된 농촌엘리트" 정도로 포괄적으로(유연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필자가 말하는 '有志集團'은 군면 단위의 '관료-유지 지배체제'와 더

- 
- 15) 물론 필자가 규정한 의미대로만 有志라는 말이 쓰인 것은 아니다. '各界(斯界)有志', '有志人士(紳士)', '有志青年(會員)'이라는 말이 있었듯이, '어떤 일에 뜻이 있거나 관심이 있음(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자주 쓰였다(구체적인 용례검토는 지면관계상 차후로 미루고자 한다). 이는 '혁신청년'도 마찬가지다. 혁신청년이라는 말은 1920년대 중반 청년회 혁신운동 과정에서만 쓰였던 용어이다(오히려 無産=프로青年, 新興=共產=左傾青年 등의 용어가 더 자주 쓰였다). 하지만 필자는 앞의 사례연구들에서 앞서 규정한 의미(의도적으로 규정한 외연과 내포)로만 위의 개념들을 사용하고자 했는데, 그 이유는 일제시기 지방정치사 연구의 '그 어떤 방법적 필요'(연구사 정리 참조) 때문이다.
- 16) 정연태는 당시 신문에 보이는, '청년유지 제씨의 발기로 思想團體 新友同盟 조직'(『동아일보』, 1927. 1. 19), '각 방면 유지, 민중대회 소집 발기인 회의 개최'(『동아일보』, 1931. 1. 20) 등의 용례를 들어, "일제 협력자에서 일제 비판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군상의 유력자도 유지로 여겨졌다"거나, "일제의 감시를 받는 요시찰 인물이나 사상단체 회원도 韓人 言論에서는 '有志'로 간주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령, 정연태는 1920년대에 혁신청년운동에 관여한 朴相煥이 1929년 금융조합 평의원, 1931년 보통학교 학무위원을 역임했다는 사실 등을 들어,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 사이에 존재했던 정치적 계선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 지도자였던 박상환(대중교서적 출판사 설립 참여)은 1930년대에 들어서서는 혁신청년운동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부여 출신 대중교 지도자인 姜錫箕(북로군정서 창설 활동)의 장남인 姜鎮求도 장암면 면협의회원과 면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데, 박상환도 강진구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판단된다(줄고 『부여군지』 참조).
- 17) 板垣龍太, 2003 『植民地期朝鮮の地域社會における〈有志〉の動向 -慶北尙州の支配構造の變容と持續』, 『東アジア近代史』第6號, 11면.

불어 형성 발전된 일종의 사회적 지위집단(social status group)으로서, 마을 단위에 존재했던 구장이나 중견인물과 같은 지방행정상의 '촌락대표자'<sup>18)</sup> 또는 필자가 말하는 '革新青年'<sup>19)</sup>과도 구별되는 존재이다. 예를 들어 藤村徳一이 편찬한 『朝鮮公職者名鑑』(1927)은, '총독부직원록'과 '공직자명감'을 각각 '人爵錄'과 '天爵錄'이라 비유한 바 있는데, 후자의 명부에 이름 석자를 올릴 수 있었던 이들이 바로 지방유지였다.<sup>20)</sup>

## 2)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의 政治的 界線

앞의 연구들처럼, 농촌사회 내의 모든 '유력자' 혹은 '농촌엘리트' 일반을 유지로 호명하는 경우, 일제하에서 지역사회운동을 주도했던 이들, 즉 필자가 말하는 '혁신청년집단'과 '유지집단'의 사회적 범주나 정치적 계선은 당연히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板垣처럼 유지집단의 범주를 폭넓고 유동적인 것으로 규정할 경우,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의 정치적 계선은 물론이고 혁신청년집단의 존재 자체도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1920년대 중반에 전국적으로 전개된 '청년회 혁신운동'(1차 분화), 그리고 1930년대 초반에 본격화된 신간회 해소투쟁 등(2차 분화)을 경과하면서, 혁신청년집단은 유지집단과 구별되는 지방정치적 한 주체로 성장했다. 양자를 꽤도난마식으로 구분

- 
- 18) 물론 군면 단위 유지들이 구장이나 중견인물로서 '행정상의 마을 대표자', 즉 행정 수행의 매개자(관치적 촌락지배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군면 단위 '관료-유지 지배체제'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양자가 수행한 정치사회적 역할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 19) '혁신청년'이라는 용어는 1925년, 1926년경 전국 각지에서 청년회 혁신운동이 왕성하게 전개될때 주로 쓰여졌다. 하지만 이 글에서 쓰인 '혁신청년'이라는 용어는 1930년대 초반 '신간회(三總) 해소투쟁'(혁명적 농조운동 및 당재건운동)의 주체까지를 포함한 일종의 '방법적 개념'이다. 편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것이기는 하나, 나름대로 역사성을 감안한 호명이라 생각한다.
- 20) 『朝鮮公職者名鑑』이 만들어진 1927년의 조선사회는 △ 8만 내외의 관료집단(조선인 관료가 전체의 절반을 약간 상회했음)과 △ 10만 내외의 유지(공직자)집단에 의해 지배되던 식민지사회였다(주 5) 논문 참조). 앞의 『朝鮮公職者名鑑』은 「緒言」에서 '朝鮮 中流 以上の 略 十萬名 人士'(2면)를 운운하고 있는데, 이는 '全鮮 數萬의 公職者'(4면)를 포함한 조선인 및 일본인 '유지집단'을 지칭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위 책에 수록된 1927년 현재의 '공직자'는 대략 3만 명 정도였다.

하면, 유지란 앞서 언급한 이른바 ‘유지(공직자) 명부’에 오른 인물들이고, 혁신청년이란 군경찰서나 면주재소의 ‘요주의·요시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인물들이다. 달리 표현하면, 조선총독 등 거물 관료들이 해당 지방을 방문했을 때 만찬 등 각종 행사나 의식에 참여했던 이들이 유지였고, 반대로 ‘예비검속’<sup>21)</sup> 등을 이유로 유치장에 수시로 갇혀 있어야 했던 이들이 바로 혁신청년이었다. 辻洪範은 다른 연구들과는 달리 道機構나 面機構 등 지방행정기관을 통한 지배 이외에, ‘군 레벨의 informal한 정치적 거래(取引)의 場’, 필자 식으로 표현하면 군면 단위 ‘관료-유지 지배체제’를 매개로 한 지방정치를 시야에 넣기는 했으나,<sup>22)</sup> 그 또한 양 집단 사이에 존재한 정치적 계선을 제대로 구명하지는 못했다.

양 집단의 정치적 계선을 주목하지 못하는 경우, 일제하의 지방정치사뿐만 아니라 해방공간의 정치사 또한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일제시기의 지방정치는 물론이고 해방공간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정치활동들도 양자의 계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해방 초기 양 집단이 부분적으로 연대한 사례도 지역에 따라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해방공간의 정세변화에 따라 곧바로 반전되었다. 전시총동원체제가 끝나볼(구장이나 중견인물)을 매개로 한 관직적 지배질서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농지개혁이나 한국전쟁 이전 시기까지 유지집단의 정치사회적 위세는 여전하였다. 유지집단의 정치사회적 위세가 결정적으로 약화된 것은 농지개혁과 한국전쟁

21) 일제시기 군 단위 경찰서는, 총독 등 거물급 관료가 지방을 순시할 때, 3·1절이나 메이테이나 러시아혁명기념일이 다가왔을 때, 論山の 경우는 심지어 師團 대항 연습훈련을 실시할 때(『동아일보』, 1935. 10. 16)조차, 해당 지역 혁신청년들을 무시로(재량으로, 아무 때나, 누구라도, 제약없이), ‘예비검속’할 수 있었다. 줄고, 2005 『일제의 국내 민족·민중운동 탄압 실태』,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삶과 민족운동』, 경인문화사, 참조.

22) 辻洪範은 재령지역 사례연구를 통해서 ‘informal한 정치’(公共財 誘致를 위한 비공식부문의 정치활동: 시민대회, 면장협의회, 도민대회)의 존재를 주목하기는 했으나, 필자처럼 이를 하나의 지배시스템(지배체제)으로 간주하는 것에는 반대했다(1999 『植民地期實力養成運動における連続と轉換: 載寧青年會幹部の地域有力者層による活動(1920-1927)』, 『朝鮮史研究會論文集』第37號, 105면). 하지만 필자가 말하는 ‘관료-유지 지배체제’는 도나 면과 같은 관료행정기구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지배(공식부문의 정치)는 물론이고 각종의 비공식적인 지배(비공식부문의 정치) 시스템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끝난 뒤, 이른바 ‘관료-끄나불(혹은 끄나불형 유지) 지배체제’가 형성되면서부터였다.<sup>23)</sup>

### 3) ‘協力論’, 植民地 公共性論, ‘近代 規律權力論’

並木真人, 金東明, 尹海東, 松本武祝<sup>24)</sup> 등은 조선인 농촌엘리트(필자 식으로 표현하면 유지나 공직자)들의 사회활동을 ‘민족↔반민족’, ‘친일↔항일’, 지배↔저항이라는 이항대립적 잣대만으로 그 의미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이른바 ‘協力論’(친일론에 대한 대체개념)을 주창한 바 있다. 물론 ‘협력론’자들이 제기한 각종 주장들은 윤희동의 표현을 빌면, ‘식민지 인식의 회색지대’를 일깨우는 참신한 제안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논증하기 위해 각각의 필자들이 동원한 ‘이론(분석틀)’이나 ‘사실(근거)’들 가운데는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 일제하의 지방정치 과정에서도 여러 공직기구(자치·자문기구, 면민·시민대회, 공공조합·단체)를 매개로 ‘공공 영역’(식민지적 공공성)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었다는 주장 △ 지방유지들의 민원·진정활동(공공재배분 문제와 관련한 정치) 혹은 실력양성운동 과정에서 근대 규율권력(혹은

23) 최봉대, 1998 『농지개혁 이후 농촌사회의 정치적 지배집단의 형성 —1950년대 경기도 용인군 관내 면의원 및 면장 충원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최봉대는 위 논문에서 1950년대 읍면의원 및 읍면장들의 사회적 구성을 분석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농지개혁 실시 이후 면의원이나 면장은 대부분 영세지주, 특히 일제시기 면서기나 면장과 같은 말단행정직 출신, 필자 식으로 표현하면 ‘끄나불’(agent: 제 스스로 정치적 자원을 갖지 못한 채 국가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들), 혹은 ‘끄나불형 유지’들의 몫이었다고 한다(앞의 논문, 260면). 군면 단위 ‘관료-유지 지배체제’의 해체과정에 대해서는 줄고, 1999 『일제의 군국주의 파시즘과 ‘조선농촌진흥운동’』, 『역사비평』 47호 참조.

24) 並木真人, 1993 『植民地期朝鮮人の政治参加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31; 김동명, 2004 『이념과 현실 -조선인과 일본인의 관료복무』,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삶과 민족운동』, 경인문화사; 윤희동, 2003 『식민지 인식의 회색지대 -일제하 공공성과 규율권력』, 『(한국의 근대성과 식민주의 비판) 식민지의 회색지대』, 역사비평사; 松本武祝, 2005 『朝鮮農村の〈植民地近代〉經驗』, 社會評論社.

식민지 권력)에 대한 동의나 합의가 꾸준히 확대되었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물론 '有志'라는 말을, 『우리말 큰 사전』처럼 '좋은(公的인, 혹은 社會的인) 일에 뜻이 있거나 열의를 보이는 사람' 정도로 그 의미를 해석할 경우, 일제하의 有志는, '公共性的 擔持者(體現者)', '公的 談論(公論)의 形成 主體', 더 나아가서는 '근대적 계몽과 개발의 주체(진보와 해방의 견인차)'였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하지만,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이른바 '有志 行勢(世)'를 한 이들을 그렇게만 평가해도 괜찮은 것인지는 좀더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일제시기 지방정치 과정에서 형성된 '公(公職, 公論)'은 대개 군면 단위 '관료-유지 지배체제'를 매개로 형성된 '擬制的(혹은 似而非) 公'에 다름 아니었다고 생각한다.<sup>25)</sup> 참고삼아 밝히면, '행세'란 흔히 '되지 못하게 處世하는 것', 또는 '行勢道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sup>26)</sup>

다른 한편, '협력론'을 제기하고 있는 논자들은 공통적으로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을 농촌엘리트니, 유력자니 하는 모호한 개념으로 몽뚱그리는 가운데, 양자 사이에 존재했던 정치적 계선을 무시하려는 경향, 심지어는 혁신청년집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으나, 이는 역편향이라 여겨진다. 민족해방(민중)운동의 고조기, 지방정치의 주전선은 <충독부권력(미군정)+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민중> 사이에서 형성되곤 했다. 이런 시기에는, 윤해동이 말하는 이른바 '식민지의 회색지대'는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었다.<sup>27)</sup> '지배와 저항의 논리', '민족 및 계급 차별의 논리'는 부음회나 각종 공공

25) 일제하에서 형성된 '公(公職, 公論)'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군면 단위 '관료-유지 지배체제'의 구성이나 작동메카니즘은 물론이고, 이를 매개로 전개된 각종 지방정치(지방행정(자치)제도, 지방지배정책, 정치 세력=주체, 정치적 사건이나 현상)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26) 『우리말 큰 사전』(삼성출판사)에 보이는 '유지', '행세' 등에 대한 풀이는 '역사성'을 반영하지 않은 그야말로 한자 뜻풀이일 뿐이다. 하지만 '유지(양반) 행세하다'라는 말에 내포된 부정적 의미는 일종의 '常識'이다.

27) 윤해동은 논문의 제목('식민지 '인식'의 회색지대')과 달리 책 제목을 '식민지의 회색지대'로 고친 뒤, 머리말에서, "식민지에서의 회색지대란 저항과 친일(지배와 저항)이라는 이원론을 거부하는 지대"(앞의 책, 10면)라고 부연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논지를 흐릴 뿐 아니라 비생산적인 논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윤해동은 지배와 저항의 논리(힘관계)가 관찰되지 않는, 그 어떤 '일상(생활)의 회색지대(공간)'가 식민지 사회 내부에 따로 존재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공공영역이나 시공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단체(조합)는 물론이고 시민대회나 공직자대회 내부에서도 강력한 규정력을 행사하곤 했다.

미셸 푸코가 말하는 ‘근대 규율권력’, 또는 신기욱 등이 말하는 ‘식민지 근대(Colonial Modernity)<sup>28)</sup>의 삼투(내면화) 현상을 아무런 매개적 설명 없이 곧바로 식민권력, 즉 일제의 조선 지배에 대한 ‘동의(합의)’로 換置한 듯한 설명들도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가령 松本은 『식민지기 조선인 하급직원의 의식구조』에서, 조선인 농촌엘리트(근대를 소비하고 신체화한 자)들의 계몽활동으로 말미암아 민중들도 ‘근대’에 대한 강렬한 욕망(동경)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는데,<sup>29)</sup> 여기서도 ‘근대 규율권력 헤게모니’와 ‘식민권력 헤게모니’가 구분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식민지 조선인들의 남다른 교육열을 ‘근대 규율권력 장치(결국은 식민권력 장치)를 실제로 경험하고자 하는 욕망’, 또는 ‘식민지 근대’나 ‘식민권력’ 자체에 대한 ‘동의(합의)’로까지 비약한 대목은 더더욱 무리라 여겨진다. 일제시기 혁신청년집단이 주도한 민중야학운동(프로문화운동)은 경찰의 탄압과 지방유지들의 비협조(후원 중단, 비방과 밀고)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다.<sup>30)</sup>

28) 신기욱, 2001 『식민지의 사회운동과 역사변동』, 석현호·유석춘 공편, 『현대 한국사회성격논쟁 —식민지, 계급, 인격윤리』, 전통과 현대, 참조.

29) 가령, “합의 형성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松本武祝, 『朝鮮農村<植民地近代>經驗』, 42면)라는 단서를 달고 있기는 하나, “근대 규율권력 장치, 대중문화, 근대 미디어를 직접 경험한 조선인뿐만 아니라 경험할 수 없었던 대다수의 조선인 사이에서도 그것이 우수(등)한 것, 바라는 것, 할 수 있으면 향수하고 싶은 것이라는 감각이 넓게 공유되기 시작했다”(위의 책, 26-27면)는 표현 등이 그것이다.

30) 1930년대 초반 민중야학(특히 혁신청년이나 농민조합 등이 주도한 야학)에 대한 총독부와 지방유지들의 탄압양상에 대해서는 줄고, 1989 『1930年代 前半期 朝鮮人 大地主層의 政治的 動向』, 『歷史學報』제122집을 참조할 것. 오성철은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교육과학사, 2000)에서, 일제시기 조선인의 교육열을 ‘민족(항일)의식의 발로’로 이해하는 견해들을 비판하면서, ‘근대교육’과 ‘사회이동’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주목했다(위의 책, 371-405면 참조).

### 3.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의 형성

#### 1) 유지집단의 개념과 범주

‘관료-유지 지배체제’란 총독부가 각종 ‘관료기구’와 ‘공직기구(자치 및 자문기구, 공공조합 및 단체)<sup>31)</sup>를 총동원하여 구축한 지방(촌락)지배의 ‘조직이나 제도’, 혹은 그 ‘기제나 양식’을 말한다. 부여와 논산군의 ‘관료-유지 지배체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郡面 廢合(1914), 朝鮮面制 실시(1917), 지방자치제 실시(1920), 농촌진흥운동(1932-1940)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나름의 제도적 기초를 완성하였다.

부여 논산지역에 존재한 유지집단의 실체를 구명하고자 할 때 먼저 『忠清南道道勢一斑』 각년판에 실려 있는 「有力者及資産家」 집계표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郡勢(邑勢)一斑’, 또는 ‘道勢一斑’ 類에 통상적으로 실리는 이같은 집계표는 대개 군청 행정계의 보고를 토대로 도청 내무부가 총괄 작성했는데, 유력자란 군내에 거주하는 주요 공직자들을 이르는 말이었다.<sup>32)</sup> 충남도청이 자산가와 유력자를 하나의 표로 집계한 것(양자의 합계도 제시하고 있다)은 이들이 바로 군 단위 유지집단의 골간이었기 때문이다.

31) 藤村徳一이 편찬한 『朝鮮公職者名鑑』(朝鮮圖書刊行會, 1927)에는 全國 13道, 12府, 220郡, 2,503面の 「道評議會員」, 「府協議會員」, 「各府 學校組合 및 學校評議員」, 「各府 町洞總代」, 「郡 學校組合」, 「郡學校評議會 議員」, 「面協議會員」, 그리고 「商業會議所議員」, 「義勇消防組頭」, 「農會幹部」, 「水產會幹部」, 「水利組合幹部」, 그리고 「銀行」, 「金融組合」, 「金融信託業」, 「保險會社」, 「電氣工業」, 「鐵道·運送·倉庫」, 「製造工業」, 「農林水產 및 工業」, 「緒名(허가된) 請負業者 및 材料商」 등의名單이 실려 있는데, 이들 공직자들이 바로 군면 단위 유지집단의 골간을 이루었다.

32) 군 단위 행정기관의 기관장들은 대개 외지인들이었으므로 군내 유력자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일제시기 군면 단위에는 ‘다양한 명칭’을 가진 기관장과 유지들의 비공식 모임(官民相話會)이 존재했다.

〈표 1〉 忠南地域의 有力者 및 資産家 分布 現況

(1932년 현재)

	대전	연기	공주	논산	부여	서천	보령	청양	홍성	예산	서산	당진	아산	천안	합계	
유력자	35	49	64	58	49	19	14	81	44	6	30	24	48	37	558	
자 산 가	5만원이상	8	5	21	36	14	16	8	14	17	9	19	14	30	21	232
	10만원이상	2	8	8	13	2	5	3	-	2	6	12	6	7	3	77
	20만원이상	7	1	-	1	-	1	1	-	-	-	3	2	2	-	18
	30만원이상	-	1	1	2	-	1	-	-	1	1	1	1	-	-	9
	40만원이상	-	-	1	2	-	-	-	-	-	-	-	1	-	-	4
	50만원이상	-	-	1	2	-	-	-	-	-	-	-	2	-	-	4
	백만원이상	-	-	1	-	-	-	-	-	-	1	1	-	-	-	3
	합계	17	15	33	56	16	23	12	14	20	17	36	26	39	24	347
합계	52	64	97	114	65	42	26	95	64	23	66	50	87	61	906	

##. 忠淸南道 內務局 編, 『道勢一斑』 1933년판 참조.

〈표 2〉 부여·논산의 자산가 및 유력자 분포

자산가		연도		1927	1932	1934	1935	1936	1937
		부여	논산						
5만원	부여	21	14	10	29	48	39		
	논산	32	36	35	43	33	35		
	충남	233	232	221	430	307	293		
10만원	부여	16	2	2	10	4	4		
	논산	12	13	13	24	16	16		
	충남	101	77	80	123	100	100		
20만원	부여	5	-	-	1	1	1		
	논산	7	1	1	9	1	2		
	충남	28	18	19	48	30	32		
30만원	부여	-	-	-	-	-	-		
	논산	-	2	3	4	3	3		
	충남	1	9	11	13	15	12		
40만원	부여	-	-	-	-	-	-		
	논산	-	2	2	-	1	2		
	충남	2	4	3	9	3	5		

50만원	부여	-	-	-	-	-	-
	논산	1	1	1	1	1	1
	충남	5	4	5	6	6	6
100만원	부여	-	-	-	-	-	-
	논산	-	-	-	-	-	-
	충남	3	3	2	1	1	1
연도		1927	1932	1934	1935	1936	1937
유력자							
부여		18(39)	49(65)	50(62)	48(88)	59(112)	-
논산		46(98)	58(113)	55(110)	72(153)	50(105)	-
충남		464(837)	558(905)	549(879)	769(1401)	612(1074)	-

##. 충청남도 편, 『도세일반』, 1928년판, 1933년판, 1935년판, 1936년판, 1937년판, 1938년판 참조. 괄호 안의 수치는 유력자와 자산가의 합계이다.

위의 표에서 첫 번째로 주목되는 것은 유력자 숫자는 비슷한데 반해, 자산가 숫자는 논산군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이는 유력자 분포는 군세와 거의 무관했음을 반증한다. 하지만 1932년 현재 청양군의 유력자 숫자가 왜 81명이나 되었는지(도청 소재지인 공주도 64명에 불과했다)는 알 수 없다. 부여군의 경우, 1930년대 중반 30만 원 이상을 소유한 자산가가 하나도 없었음에 반해 논산군은 6명이나 되었다. 두 번째로 주목되는 것은 1927년의 수치를 제외하면 부여군과 논산군의 유력자 숫자는 대략 40-50명 선이었다는 점이다. 1925년 2월 ‘공주 유지’들이 주최한 충남도지사 초청 간담회에 대략 30여 명의 유지들이 참석했다는 점,<sup>33)</sup> 1934년 6월 『조선중앙일보』의 「강경논산 소개판」에 소개된 논산군내 각계 유지 숫자가 대략 25명 수준이었다는 점<sup>34)</sup> 등은 군

33) “지난 5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公州郡 有志 약 30여 명이 충남 금융조합연합회 樓上에 회합 공주군을 순시차로 來臨한 本道知事 石鎮衡氏를 초대하여 다화회를 개최하였는데 민간이 제출한 제목은 如左한바 石지사는 民意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고아원장이 종래 내무부장이던 것을 民間의 有力者로 추천하기로 하고 좌기 사항(교통, 교육, 면행정, 산업 기타 문제 —필자)을 토의하였다고 한다.” 『公州 有志 茶話會』, 『동아일보』, 1925. 2. 10.

34) △ ‘논산 산업계 제일인자’ 尹吉重 △ ‘독실한 종교가’ 朴泰一(사찰 주지) △ ‘주도한 이론가’ 朴在新(도평의회원) △ ‘刀圭界의 거성’ 鄭潤海 △ ‘도규계 중진’ 金憲植 △ ‘한약계 三雄’ 李雲泳, 扈淳聖, 裴榮瀟 △ ‘착실한 실업가’ 金相德 △ ‘객주계의 원로’ 金敬植 △ ‘포목계의 獨步’ 朴順圭 △ ‘만인 칭송하는 덕망가’ 金

단위(레벨) 유지집단의 규모가 대략 위와 같은 정도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위 표에 집계된 인물들을 군면 단위 유지집단의 전부라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레벨은 떨어지나 면 단위에도 군 단위만큼의 '각계 유지'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위의 집계는 모든 면에 십수 명씩 존재했던 △ 면협의원(10명 내외)이나 학교평의원(면당 1인) △ 농회, 삼립조합, 수리조합과 같은 면단위 공공단체(조합) 간부 △ 각종 유지단체(읍면 번영회, 각종 기성회) 간부 △ 각 동리 구장(구장도 넓은 범위의 공직자였다) 등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다. 군 단위 유지란 군 레벨에서 '유지 행세'를 할 수 있던 자이고, 면 단위 유지란 자기가 살고 있는(활동하고 있는) 면 레벨에서나 '유지 행세'를 할 수 있던 자였는데, 이들 간에는 명백한 서열이 존재했다. 물론 道나 洞里 단위에도 '유지 행세'를 하던 이들이 존재했다. 하지만 '道有志(八道有志)'<sup>35)</sup>니, '洞里有志(마을 유지)'<sup>35)</sup>니 하는 개념들은 관행적인 표현일 뿐 정치사적으로(정치세력이나 집단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큰 의미가 있는 용어는 아니었다.<sup>36)</sup> 왜냐하면 일제하의 '관료-유지 지배체제'는 주로 군면을 단위로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

哲洙 △ '사진술의 천재' 宋鼎斗 △ '곡물계의 인물' 畑田一藏(곡물검사소장) △ '실업계 중진' 朴泳來 △ '薄利 本位' 小川 △ '代書界 兩 權威' 趙英九, 趙炳武 △ '양복계의 패왕' 李\*\*, 俞\*\* △ '快活 勇敢한 인물' 村岡(경찰서장) △ '紙物 專業의 삼익사' 金鐵洙, 田在\* △ '노력의 결정 恒産社 전무 金\*漢, 『江景·論山 紹介版』, 『朝鮮中央日報』, 1934. 6. 3. 1930년대 중후반 조선어신문사들은 경쟁적으로 지방소개판을 만들었는데, 이는 독자 및 광고모집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 35) 『洞里有志(아산군 인주면 공세리 유지 — 필자)가 貧民을 救濟』, 『동아일보』, 1932. 9. 21.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 들어가 동아일보 기사색인을 검색하면, '有志'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사제목이 무려 2,091개나 확인되는데, 가장 자주 보이는 것은 역시 道나 郡, 혹은 府·邑·面 有志라는 표현('지역명+有志')이다.
- 36) '도나 촌락 단위(레벨)의 유지'라는 뜻으로 '八道(朝鮮) 有志'니, '洞里(마을) 有志'니 하는 말을 관행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용어들은 '분석 개념'으로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일제시기 팔도(전국)나 촌락 단위의 '관료-유지 지배체제', 또는 '有志政治'는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사적으로 볼 때도 큰 의미가 없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 2)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의 분화

3·1운동을 전후한 시기 전국 각지에는 군수(면장)의 지지와 후원 가운데면(주로 지정면) 단위의 청년수양회(초기청년회)가 우후죽순처럼 결성되었다. 이때 '유지청년' 주도로 조직된 청년수양회는 면협의회가 구성되기 이전 시기 일종의 '郡政 諮問機關(군민 대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sup>37)</sup> 그러나 1920년대 중반 무렵부터 상당수의 유지청년들이 면협의회(자문기구)나 학교평의회, 농회나 금융조합과 같은 공직기구에 진출하자,<sup>38)</sup> 이들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청년(이른바 '사상운동'의 주체)들에 의해, 이른바 '청년회 혁신운동'(혁신총회, 민중총회)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sup>39)</sup> '혁신총회'의 주요 논제는 대개 △ 강령과 규약을 바꾸는 것 △ 민중(변혁) 지향적 활동(노동야학 개최, 소작문제 해결, 농민조합 조직 등 대농민 활동)을 강화하는 것 △ 조선청년총동맹에 가입하는 것 △ (무자격, 부적격) 회원을 정리하는 것 △ 회장제를 위원(장)제도

37) 초기청년운동에 대해서는, 앞의 주 6)의 서덕순과 맹의섭의 사례연구를 참조할 것. 논산군 양촌면 인천청년회(1930년대 초반 논산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혁신청년회로 성장하였다)의 경우는, 면 주재소의 일본인 순사가 義捐金을 약속할 정도로 총독부 권력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동아일보』, 1925. 9. 17).

38) 1920년대 초반 조선인 유력자들은 지방제도 개정(지방 개량)이나 면 단위 자문기구 설립 등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924년경부터 자치권이 나 참정권을 부여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운동선의 분열(조선인 유력자들의 자문기구 및 공직 참여)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초기청년운동 주체들이 각종 자치(자문)기구나 공직기구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도 이같은 정세변화 가운데서였다(한상구 2005 『신간회의 반자치운동 노선과 민족협동전선노선』,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독립정신 (학술논문집 I)』 419-429면 참조). 예를 들면 부여 규암수양청년회의 중심인물이었던 李錫圭(면협의원 역임), 양촌면 인천청년회 부회장이었던 姜永植(면협의원 역임), 강경청년회 회장이었던 尹吉重(학무위원, 도평의회원 2회 역임) 등이 그러한 유형의 인물들이었다.

39) 청년회 혁신운동에 대해서는 한국역사연구회 근현대청년운동연구반 지음, 1995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청년사), 그리고 이에 대한 필자의 서평(출고, 1995 『신간서평: 한국청년운동사의 새로운 이해』 『역사와 현실』 18호) 등을 참조할 것. 『동아일보』 기사 색인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1924년에는 거창, 포항, 풍산, 이천, 장호원, 함덕 등지에서, 1925년에는 삼천포, 안동, 김천, 창원, 김해, 하동, 순천, 안주, 벌교, 함흥, 예천, 영일, 공주, 김제, 청도, 순창, 광양, 예안, 영덕, 의성 등지에서, 그리고 1926년, 1927년(특히 1926년)에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 지역에서 '청년회 혁신운동(革新總會 開催鬭爭)'이 전개되었다.

로 바꾸는 것 △ 조직의 명칭을 바꾸는 것 등이었는데, 대부분의 초기청년회는 이같은 ‘혁신총회’를 계기로 조직의 성격(활동의 주체)이 바뀌거나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부여 논산지역의 초기청년회(논산청년회 1917년 창립)들도 1920년 중반 무렵부터 상당수의 유지청년(간부급 인물)들이 면협의회나 각종 공직기구에 진출하면서, 조직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거나 조직(간부진)개편에 대한 요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강경지역의 경우는 강경청년회 회장이었던 尹吉重(대지주, 도평의원 역임)이 전횡을 일삼자, 혁신청년들은 1925년 11월 혁신총회를 개최한 뒤, 조직 개편과 동시에 조선청년총동맹에 ‘至急 加盟’할 것을 결의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sup>40)</sup> ‘혁신총회’가 열리지 않는<sup>41)</sup> 1922년 2월에 창립된 양촌면 인천청년회도 이와 사정이 유사했다. 인천청년회의 경우 초창기에는 姜永植(1926년 현재 면협의원) 등 이른바 ‘유지청년’들이 주도권을 장악했으나,<sup>42)</sup> 1925년경부터는 張日煥, 權寧珉 등 이른바 혁신청년들이 조직 활동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sup>43)</sup>

40) 강경의 한 記者는 1926년 1월 7일자 『동아일보』 기사(『年頭의 江景相』)에서 강경청년회 혁신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강경청년회는 과거 일년간을 두고 外爭內訌으로 안정될 날 없이 강경사회와 전조선을 喧動케 한 죄상을 들자면 一二가 아닌 문제 多端한 단체이다. 그리하여 소위 革清大會도 있었고 革新派의 승리로 前日의 제도를 廢하고 卞프르(프롤레타리아트의 준말 -필자)식의 革年團體(혁신청년단체의 준말 -필자)로 변혁되었다. 그러나 일반이 욕망하던 理想에는 부합되지 못하여 일반의 주목이 革清派 金후의 행동에 집중되고 있다”.

41) 창립 초기 인천청년회는 회관을 건립하고 야학을 운영하는 등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나, 곧이어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보인다. 1924년 12월경 인천리 청년들은 ‘침체되었던 청년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面內 一般有志의 義捐’을 모집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경찰의 탄압과 ‘말 바꾸기’(의견을 약속했다가 돌연 취소함)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다(『警察 行動 如此/ 鄙陋한 巡査 行動과 無理한 警察의 彈壓』, 『동아일보』, 1925. 9. 17).

42) 1921년 4월 현재 인천리 청년회의 회장은 李任鎬, 부회장은 姜永植, 총무는 徐琦勳이었다. 강영식은 청년회관 건립, 仁明女學校(예배당 내에 설립한 사설강습소) 설립 등에 많은 공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1921. 3. 29 ; 1921. 4. 24 기사 참조.

43) 1926년 5월 양촌청년회는 △ 소작권을 임의로 이동하거나 고율소작료를 부과하는 지주들에게 ‘警告文’을 발송하는 건 △ 隆熙皇帝 因山日에 회원 일동이 회합하여 애도행사를 갖는 건 △ 전북민중운동사건으로 복역중인 張日煥의 가족을

더 나아가 부여 논산의 혁신청년들은 1920년대 후반경부터 군 단위로 조직을 확대하면서, 전국 단위 조직과의 연대(특히 청년동맹 가맹)도 강화하고자 했다. 물론 이런 시도는 경찰의 탄압과 자체 역량 미숙으로 말미암아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가령 논산지역의 경우는, 1927년 9월 현재 8개의 청년회와 각각 2개의 무산청년동맹과 노동청년회가 활동하고 있었으나,<sup>44)</sup> 군 단위 청년조직(논산청년동맹)을 결성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런 사정은 부여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부여지역의 혁신청년들도 1929년 5월경부터 부여청년동맹을 창립하는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뜻을 이룰 수 없었다.

〈표 3〉 1929년 1월 현재 논산군의 사회운동단체 설립 현황

단체명	창립시기	회원수		현재 회장(위원장)
		창립시기	현재	
논산청년회	1923. 4	61	98	許 璜
논산군 연산청년회	1926. 7	37	41	吳仁燮
양촌면 인천청년회	1922. 2	56	82	張日煥
은진면 해창리청년회		28		桂昌順
논산노동조합	1926. 4	72	81	崔元燮
논산군 연산노동조합	1926. 5	97	129	吳仁燮
성동면 노동청년회	1927. 4	64	87	姜永培
성동면 노동청년조합	1927. 3	56	65	崔光鎭
상월면 대명농민조합	1926. 10	57	83	金碩鉉
성동면 광흥친목회	1925. 3	32	47	劉洪烈
논산용우친목회	1924. 4	69	54	金奇性
성동면 농민회	1927. 9	147	369	朴喜昌
채운농민회	1927. 2	89	113	趙淳奎
논산형평사	1923. 3	28	19	金大吉

##. 『地方一覽(十一) 論山郡』, 『東亞日報』 1929. 1. 12 참조 작성.

1920년대 중반에 전개된 청년회 혁신운동과 신간회 설립운동은 (지방)자치

위문하는 건 등을 결의하였다. 『동아일보』, 1926. 5. 15.  
44) 『동아일보』, 1927. 9. 29.

운동에 대응한 일종의 ‘反自治運動’이었다. 따라서 청년회 혁신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에서는 대체로 신간회 설립운동도 활발했다. 부여 논산군의 경우도 한결같이 신간회운동이 부실했는데, 그 이유는 역시 청년회 혁신운동이 부진한 탓이었다.<sup>45)</sup> 부여군의 경우 조직결성에는 성공할 수 있었으나 곧바로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보인다.<sup>46)</sup> 하지만 두 지역 모두 1920년대 중후반기 ‘청년회 혁신운동’ 과정을 거치면서, 미약하게나마 지역사회운동의 주체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형성된 혁신청년들은 1930년대 초반경부터 부여농민조합 결성투쟁, 화성당 결성투쟁, 부여공산주의자협의회 활동, ‘논산 양촌 농민조합 데모사건’이나 ‘소작계 조직협약사건’ 등을 주도하였다.

그러면 부여 논산지역의 혁신청년은 대략 얼마나 되었을까? 물론 사상사건 관련자(논산 115명, 부여 138명)나 요주의·요시찰인(283명/14郡)만을 문제 삼는 경우(계다가 여기서 의병 및 3·1운동 관련자, 해외 독립운동가, 기타 외지 활동가 등을 제외하면), 아무리 지역사회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이라도 그 숫자는 100명 이상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일제시기 ‘요주의·요시찰인 명부’에 오른 이들은 공식적으로 총독부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받던 거물급(제도적 관리 대상자, 서면 보고 대상자)들이었다.<sup>47)</sup> 일제시기 군 경찰서나 면 주재소에는 공식적인 명부와는 별도로 비공식적인 명부가 존재했는데, 필자가 말하는 혁신청년집단이란 이들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45) 부여 논산지역의 청년회 혁신운동이나 신간회 지회운동에 대해서는, 줄고, 『일제하 농민조합운동 연구』와 『부여군지』·『논산시지』 등을 참조할 것.

46) 부여신간지회는 1929년 2월 辛鍾勳, 白南祺, 朴英達 등 읍내 인사(혁신청년들의 참여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들에 의해 창립되었다. 하지만 활동은 지지부진했다. 한편, 논산군의 경우는 1929년 10월 경 강경지역 혁신청년인 朴尙煥, 金星園, 片順甲 등에 의해 신간지회 설립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나, 조직을 창립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균영, 1993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참조.

47) 『요주의·요시찰인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은 총독부 경찰의 공식(제도화된) 업무였다. 『동아일보 기사색인』을 검색하면, 『요시찰인 명부와 여관 숙박부를 조사/ 某某 密使가 들어왔다고』, 『동아일보』, 1925. 10. 31 ; 『요시찰인 조사 예비검속 前提?』, 『동아일보』, 1928. 11. 2; 『각 사회단체를 필두로 요시찰인 명부 정리』, 『동아일보』, 1930. 1. 7 등등의 제목이 확인된다.

〈표 4〉 忠南地域의 思想事件 關聯者 分布

(1935년 5월 현재)

	치안유지 법	보안법	폭력행위 처벌법	기타사상 범죄	동맹휴교	기타주의 자	합계
대전	12	21	66	10	11	16	66
조치원	1	29	11	2	0	15	58
공주	15	80	11	16	7	9	138
강경	20	34	13	17	2	29	115
부여	4	37	23	24	4	46	138
서천	3	22	12	0	2	49	88
보령	7	14	4	0	0	17	42
청양	7	114	27	1	1	16	166
홍성	10	22	21	17	8	16	94
서산	6	70	7	3	0	17	103
당진	10	8	8	3	5	20	54
예산	8	137	3	1	2	24	175
온양	12	6	0	0	3	23	46
천안	2	38	0	4	0	26	70
합계	117	632	146	98	37	323	1,353

##. 『忠淸南道下의 思想概況竝同道論山·夫餘·靑陽·禮山及唐津郡各思想善導機關의 活動狀況』, 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思想彙報』 第9號, 昭和十一年 十二月, 21 - 22면.

지역마다 편차가 있기는 하나, 1920년대의 경우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의 출신성분(血緣, 地緣, 學緣)이나 사회적 구성은 크게 구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년회 혁신운동이 부진했던 지역의 경우는, 양자의 정치적 계선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1930년대에 들어(특히 광우학생운동 이후) 체제변혁적인 지역사회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양 집단은 정치적 입장(사상과 노선)은 물론이고 사회적 구성조차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함경도지역처럼 혁명적 농노조운동이나 당재건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에서는,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 사이에 여러 형태와 내용의 '戰線'이 형성되곤 했다. 가령 혁명적 농노운동의 주체들이 표방한 '조선혁명은 토지혁명이다'라는 구호는 양 집단 사이에 존재했던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 모순관계의 일단을 잘 보여준다. 당시

혁명적 농조운동의 주체들은 혁명적 농조와 당재건 준비조직을 결성한 이후 결정적 시기(日蘇·日美 開戰, 또는 공황 등으로 인한 체제 붕괴)가 도래하면 무장봉기를 통해서 '노농소비에트'(인민정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여러 형태의 투쟁을 전개하였다.<sup>48)</sup>

물론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이 사사건건 대립하고 갈등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사안에 따라서는, 총독부권력↔유지집단+혁신청년집단+지역주민, 심지어는 총독부권력+농민↔유지(지주)집단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기도 했다. 가령 '국가 자원(공공재)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과 지역 사이에 분쟁(민원·진정사건)이 발생할 경우, 戰線은 더더욱 복잡다단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소작문제, 강제 농정 문제, 수리조합 및 삼림조합 문제, 부역이나 공과금(부과세) 징수 문제 등을 둘러싼 분쟁의 경우, 戰線은 대체로 총독부권력+지주(유지)↔혁신청년집단+농민(주민)의 형태로 형성되곤 했다.

#### 4.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의 정치활동

이 장의 서술목적은, 부여 논산지역에서 전개된 '農民運動과 小作爭議', '民願·陳情活動', '思想善導活動' 등을 살피는 과정에서 양 집단 사이에 존재했던 정치적 입장 차이나 界線(戰線)을 분명히 드러내는 데 있다. 부여 논산지역에서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의 정치적 계선이 분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이른바 '청년회 혁신운동'이 본격화하는 1920년대 중후반 무렵이었다. 그러다가 1930년대 초반 혁명적 농조·노조운동이 고조되는 시기에 이르면, 양자 사이의 정치적 갈등은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했다. 1936년 고등법원 검사국이 발행한 『思想彙報』에는, 충남 각군의 사상운동 상황과 더불어, 이른바 사상선도기관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문건(『사상선도기관 활동상황』)<sup>49)</sup>이 하나 실려 있는데, 위 자료는 양자 사이에 존재했던 정치적 계선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48) 졸고, 1993 『일제하 농민조합운동 연구』, 역사비평사, 참조.

49) 『忠淸南道下의思想概況並同道論山·夫餘·靑陽·禮山及唐津郡各思想善導機關의活動狀況』, 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思想彙報』第9號(昭和十一年十二月)

## 1) 농민운동과 소작쟁의

일제시기 유지집단이 보유한 '정치 자원'은 '재산(토지재산)'과 '사회활동 능력(공직수행 능력, 일본어 구사능력)', '當局 信用'(공직 활동 경력)과 '社會 人 望'(민원해결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등이었으나, '유지 행세'를 위한 필수조건은 역시 '토지재산'과 '당국신용'이었다. 일제시기 지방유지들은 마을(농촌진흥회) 단위에 존재했던 구장이나 중견인물(청년)들과는 달리, 소작인과 마름, 집사와 산지기 등 다양한 '아랫것(수하)'들을 거느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직 활동'을 통해서 그 나름으로 '당국신용'을 꾸준히 축적해온 이들이었다.

농촌진흥운동의 실시와 더불어 농회·금융조합·수리조합과 같은 공공단체나 조합, 또는 농촌진흥위원회·소작조정위원회·사상정화위원회와 같은 관민협동위원회 등을 매개로 한 농민(소작인 혹은 촌락) 지배가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서, 일제하의 대지주들은 촌락보다는 부읍 등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농민들을 통제하는 전략을 선호하기 시작했다.<sup>50)</sup> 왜냐하면 촌락에 거주하는 경우, 촌락생활 특유의 面接性 때문에 '溫情主義(paternalism)'에 기댄 농민들의 읍소(泣訴)나 '개기기'(엉기기)<sup>51)</sup>에 무심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는 테러위협조차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재지 대지주들의 촌락 이탈은 농촌진흥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더욱 가속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면 촌락 단위에서 私的으로 관행되던 溫情主義조차도 군면 단위의 '관료-유지 지배체제'를 매개로 구현되곤

50) 府나 邑地域에 거주하는 경우, '公職 活動(有志政治)'을 하는데도 유리(특권과 기회의 향유)할 뿐만 아니라 세금, 즉 지세할 호별할 등 면부과금이나 부역대납금 등의 각종 잡부담도 줄일 수 있었다. 농촌진흥운동기 각 지방마다 재지대주(촌락 혹은 면내 거주 지주)의 도시 이주가 문제시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었다.

51) 일제하의 농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흔히, 속이기 → 굶질대기(비비기) → 눈물짜기 → 개기기(엉기기) → 막가기 등의 투쟁전술을 활용했다. "이게 어디서 개겨"라는 말이 아직도 쓰이듯이, '개기기'(어원은 '밀가루를 개다' 할 때의 '개다'이다)는 당시나 지금이나 '돈 없고 뺨 없는' 민중들이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어찌 보면 대단히 '反社會的'인 투쟁전술이다. 하지만 '개기기', '개기다'라는 말은 『우리말 큰 사전』에 '입적'조차 되어 있지 않다. 위의 큰 사전은 '개개다'라는 말을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다"라고 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했다.<sup>52)</sup>

〈표 5〉 1930년 현재 관내·관외(管内·管外) 지주의 소작지 면적

(단위: %)

군명	군내지주	도내지주	도외지주	군명	군내지주	도내지주	도외지주
공주	75	15	10	연기	64	18	18
대전	62	18	20	논산	66	14	20
부여	57	18	25	서천	54	18	28
보령	54	19	27	청양	51	20	22
홍성	68	13	19	예산	59	17	24
서산	73	09	18	당진	62	12	26
아산	48	16	36	천안	46	13	41
충남	60	10	30	전국	69	18	13

## 朝鮮總督府 編, 1932 『朝鮮ノ小作慣行』 續篇, 3면 참조 작성.

논산군의 경우 대지주(100정보 이상 소유자)<sup>53)</sup>나 郡內 地主가 상당히 많았음에 반해, 조직 농민운동은 지지부진한 편이었다. 예를 들면, 논산군에는 1920년대 중반 몇 개의 면 단위의 농민조합(노성면, 채운면, 성동면)이 결성되어 있었으나, 군 단위 합법 농조는 존재하지 않았다. 노성농조(=대명농조)는 1927년 12월에 열린 총회에서 농민총동맹 가맹을 결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나, 군 단위 농조를 결성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sup>54)</sup> 1927년 9월에

52) 일제시기에 만들어진 『公山誌』(공주향교, 1923), 『洪城郡誌』(洪城郡廳, 1925), 『瑞山郡誌』(서산군청, 1927), 『燕岐誌』(연기향교, 1934) 등에는 이전의 『邑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이른바 「慈善」(「社會奉仕」) 항목이 덧붙여지기 시작했다. 위의 『郡誌』에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은 「공신」, 「효자」 등과 달리 대부분 왕성한 사회활동을 전개하던 대표급적인 지방유지들이었다.

53) 논산지역 대지주(100정보 이상 소유자)는 논산읍에 1명, 구자곡면에 4명, 성동면에 4명, 광석, 연산, 양촌면에 각각 1명이 거주하였으나, 이들도 본가만 면내에 있었지 실제의 생활근거지는 대개 부(경성부)·읍(논산, 강경)지역이었다.

54) 『중외일보』, 1927. 12. 10. 대명농조의 조직부서는 집행위원회(장), 서무부, 재무부, 조사부, 교양부, 구조부 등이었는바, 당시 총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조선농민총동맹 가맹', '농민야학 후원', '조합원 계급의식 각성', '조합원 단결 공고화' 등이었다.

창립된 성동면 농민회는 1928년 3월 악지주와 마름들에게 조직 명의로 경고문을 발하거나, 교섭위원들이 직접 지주가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투쟁을 전개했으나,<sup>55)</sup> 곧이어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연유로 논산지역의 對地主鬭爭은 개별 분산적인 행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지주와 마름들은 군면 단위의 ‘관료-유지 지배체제’, 특히 경찰기구나 농회, 소작조정위원회 등을 매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을 조정해 나갈 수 있었다.

일제시기 논산지역에서 발생한 소작쟁의는 대부분 소작권 이동문제와 관련한 분규들인데, 신문보도에 따르면 △ 1923년 봄 경성 지주 尹德榮 △ 1924년 봄 유성 거주 지주 沈在厚 △ 1925년 봄 은진면 지주 姜永安 △ 1925년 7월과 11월 동양척식주식회사<sup>56)</sup> △ 1926년 봄 부적면 부항리 지주 金明洙 △ 1930년 봄 대구 지주 李章雨 △ 1933년 봄 경성 지주 李相玉 △ 1933년 봄 경성 대지주 閔丙奭 등의 소유 토지에서 쟁의가 발생하였다(앞의 시군지 참조). 이같은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논산지역의 소작농민들은 경찰과 군면 등에 ‘조정 권한’을 위임하거나, 지주와 마름들의 공갈 협박에 “어찌할 줄 모르고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을 뿐”<sup>57)</sup>이었다. 당시 신문들은, 대부분의 소작사건이 군당국, 경찰, 군농회, 소작조정위원회 등의 중재(조정)로 ‘圓滿 解決’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재지주 토지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 전반기에 발행한 부여지역의 ‘농민조합 결성 투쟁사건’, ‘화성당 사건’, ‘부여 공산주의자협의회 사건’, 그리고 논산 양촌면 ‘적기시위사건’과 ‘소작계 조직 협의사건’ 등은 모두 혁신청년들이 농민을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이었다. 특히 1930년 9월경부터 시작된 부여지역의 군 단위 농민조합 결성투쟁은 상당한 준비과정을 거친 연후에 시도되었으나 경찰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성사가 여의치 않았다. 부여지역의 농민조합 결성투쟁은 1931

55) 『조선일보』, 1928. 4. 1.

56) 사건이 발생하자 ‘(성동면) 우곤노동조합’이 공동 이양을 시도하는 등 ‘대책 강구’에 나섰다고 보도하고 있으나(『동아일보』, 1925. 7. 1), 이는 통상의 ‘조합(union)’이 아니라 일종의 ‘두레조직’으로 추정된다.

57) 『全收穫을 다 바쳐도 猶爲不足하는 東拓/ 논산군 동척 소작인들의 곤경』, 『동아일보』, 1925. 11. 7.

년 6월에야 서면대회 형식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sup>58)</sup> 하지만 그해 8월 경찰이 조합의 간판을 강제로 철거하자, 부여지역의 혁신청년들은 비합법적(지하화)인 방법으로 조직 결성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1931년 말부터 부여지역에서, 화성당사건,<sup>59)</sup> 부여공산주의자협의회사건, 칠모회사건 등 각종 비밀결사사건이 속출한 것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였다.

1931년 10월경에 조직된 '부여 공산주의 연구협의회'(1933년 3월 공산주의 연구협의회로 명칭변경)는 책임대표자(이호철), 조사부(노명우), 조직부(柳基燮), 선전부(吳祺泳), 평의원(강일구, 최재봉) 등의 부서를 두고, 야학 및 연극 공연(프로문화운동) 등을 통해 농민들을 조직화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9인을 제외한 나머지 45명의 관련자들은 대부분 농민이나 머슴들이었다. 논산 양촌면에서 발생한 적기시위사건은 1932년 5월경 경찰이 '머슴계'(노동조합) 설립(창립총회)을 불허하자, 농민(주로 머슴)들이 적기시위를 감행한 사건인데, 위 사건으로 공판에 회부된 혁신청년은 權寧珮, 崔業同, 李指用, 韓承基, 孫永植, 韓泰洙, 金在用, 金在喜, 崔業同, 崔培玉 등이었다(검사국 송치자 19명). 양촌면에서는 1933년 10월경에도 '소작계'를 조직하려 했다는 혐의로 愼杓晟 등 5명의 혁신청년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앞의 시군지 참조).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의 관계는 운동의 조건과 정세에 따라 끊임없이 유동하였으나, 혁신청년집단 내부에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조선공산당이나 국제공산당의 지도)이 강화되면서, 양자의 관계는 점점 더 적대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1930년 3월경 양촌면 인천리에서 발생한 청년회원과 소방조원 사이의 폭행사건은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양촌면 소방조주 姜某<sup>60)</sup>가 인천청년회의 허가도 받지 않고 청년회관에서 소방

58) 부여농민조합은 각지에서 민중야학을 운영함과 동시에(야학 활동을 기초로 하여 농민조합을 조직했다고도 볼 수 있다) 조직 확대를 목적으로 홍산면 조현리, 규암면 합송리, 남면 마정리, 장암면 장하리 등지에 공동경작지와 공동퇴비장을 설치하기도 했다.

59) 예심종결서에 따르면 화성당의 행동강령은 "노동자 농민층에 들어가 의식을 조장하고 당원을 모집하는 것"이었으며, 부서는 비서부(강성구), 계획부(서진), 조직 선전부(유기섭) 등이었다고 한다.

60) 1931년 현재 양촌면 消防組頭는 초기 청년회 활동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회관

조 ‘出初式’(宴會 포함)을 개최한 것 때문에 위와 같은 폭행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나,<sup>61)</sup> 裏面의 이유는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 사이의 뿌리깊은 불신과 적대감이었다고 판단된다. 사건 발생 며칠 뒤 양촌청년회 집행위원이었던 권영민이 경찰에 피검되었는데, 당시 신문은 피검 사유를, “거번 인천 청년회와 양촌 소방조의 충돌되었던 일에 관한 일이나 아닌가”라고 추측하였다.<sup>62)</sup>

일제시기 식민지 농민들이 ‘관료-유지 지배체제’나 ‘식민지 지주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체제변혁적인 계급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혁신청년집단의 ‘지도’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혁신청년집단의 지도가 농민운동 내부에 언제나 관철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sup>63)</sup> 농민들은 농민운동이 퇴조하는 시기에는 ‘관료-유지 지배체제’와 타협<sup>64)</sup>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조기가 도래하면 농민들은 혁신청년집단과 ‘連帶’(指導의 수용)하는 가운데 ‘관료-유지 지배체제’(총독부권력과 유지집단의 지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투쟁에 떨쳐나섰다. 해방공간의 인민위원회운동은 ‘관료-유지 지배체제’를 분쇄하기 위한 농민들의 자치기구 건설투쟁, 즉 일종의 대항(대안) 권력운동이었다.

---

건립 자체에도 크게 기여한 姜永植이었다. 安齊霞堂, 1932 『忠清南道發展史』, 421면 참조. 강영식(현직 면협의회원)은 1930년대 초반 『동아일보』 논산(양촌) 분국(지국)장이나 기자(권영민, 신표성 등등)들이 각종 결사사건으로 대거 검거된 이후 동아일보 논산지국의 고문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1933. 5. 28.

61) 『동아일보』, 1931. 3. 7.

62) 『동아일보』, 1931. 4. 11.

63) 졸저(『일제하 농민조합운동 연구』, 역사비평사, 1993)를 포함하여 대부분 농민운동사 연구들은 일제하의 농민들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정치사회의식(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부당 전제해온 감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해 李潤甲은, 농민들의 정치사회의식은 몇몇 지역(운동의 선진지역)과 시기(운동의 고조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낮은 수준(封建的 班常意識)이었다는 주장을 개진한 바 있다(이윤갑, 2001 『1920년대 농민층의 계급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역사와 현실』39호).

64) 소작쟁의도 어찌 보면 농민들의 민원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군면 단위 ‘관료-유지 지배체제’, 즉 각종 공공조합이나 단체, 또는 유지집단은 농민들에게 일종의 ‘비밀 언덕’이기도 했다.

## 2) 민원·진정 활동

일제하의 조선사회는 '공식적인 정치(정당과 의회정치)'가 부재한 '식민지 사회'였다. 총독부권력은 일본인이건 조선인이건, 유지건 일반주민이건, 어느 누구에게도 공식적인 정치참여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3·1운동 이전 시기까지 총독부권력은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물리적 강제력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곤 했다. 하지만 위험부담의 측면에서건 비용의 측면에서건 모든 정치적 갈등을 오로지 물리적 폭력만으로 풀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할 수 있는 조절장치가 필요했다. 총독부권력이 유지집단을 포섭하여 '관료-유지 지배체제'를 형성한 것, 그리고 비공식부문의 정치, 특히 '민원 및 진정활동'<sup>(65)</sup>을 의도적으로 '허용'하거나 '장려'한 것 등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총독부권력은 민원·진정활동을 통해서 지방유지나 주민들을 체제내로 포섭할 수 있었던 반면, 지방유지나 주민들은 '관료-유지 지배체제'를 매개로 한 비공식적인 정치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나 불만을 해소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sup>(66)</sup>

'관료-유지 지배체제'를 매개로 한 비공식 부분의 정치는 자치기구나 공직기구 이외에, 시민회나 기성회,<sup>(67)</sup> 有志懇談會<sup>(68)</sup>나 公職者大會,<sup>(69)</sup> 시민대회나

65) 일제시기부터 공직자라는 말과 함께 '民願'이라는 말이 자주 쓰였다. 민원이란 요즘의 의미대로라면 국가(행정)권력의 공적 활동(국가의 공공서비스 활동)에 대한 국민(지역주민)들의 요구나 불만을 지칭한다. 『東亞日報 索引』을 보면 「民願 陳情」이라는 항목이 보이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대부분 ① 도청, 학교, 세무서 등 관공서 유치문제, ② 철도와 도로와 항만 등 사회간접 자본 유치문제, ③ 수리조합 설치 반대문제, ④ 호별세 등 각종 부과금 문제, ⑤ 공장 유치 및 시장 설치 허가문제 등과 관련한 사건들이다.

66) 일제시기 有志集團 內部的 '序列'은 대체로 民願·陳情活動 過程에서의 역할, 달리 말하면 '유지 행세'를 할 수 있는 역량 유무에 따라 결정되었는바, 上位 序列은 늘 군이나 면(읍) 단위의 '日本人 有志'들의 몫이었다.

67) 일제시기 『동아일보』 기사제목을 검색하면 '期成會'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사가 무려 1,631개(期成會+有志=70건, +陳情=80건, +大會=95건)나 확인된다. 일제시기 제법 규모가 있는 민원·진정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유지들은 예외없이 기성회를 조직하고 활동하였다.

68) 특정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해당지역 유지들의 '간담회'(면장, 군수

면민(군민)대회<sup>70)</sup> 등을 매개로 전개되었다. 치안유지 명목 등으로 일부의 대회가 금지되는 경우(특히 1931년에 많았다)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대회는 溫情主義(一視同仁의 恩惠)를 집단적으로 호소하는 활동에 다름 아니었다. 민원·진정사건은 대개 총독부 국가권력, 즉 ‘관료-유지 지배체제’를 인정하는 위에서 전개된 것이었으므로, 체제변혁운동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부여 논산지역에서 민원·진정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곳은 역시 강경이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단히 강력한 일본인 사회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sup>71)</sup> 예를 들어 △ 1911년 대전-강경 간 호남선 개통(1912년 강경-이리-군산 노선, 1914년 이리-목포 노선 개통) △ 1920년 공립상업학교 설립 △ 1922년부터 1924년까지 실시된 강경천 제방공사(총공사비 36만 5천원) △ 1931년의 읍 승격 및 시가지 구역 확장 △ 1936년 강경천 및 논산천 개수사업(총공사비 520만원)<sup>72)</sup> 등은 모두 강경지역 일본인들의 민원·진정활동에 힘입

---

는 물론이고 해당 사건의 관련 공직자나 실무 관료가 참여하는 경우도 허다했다)가 열리는 것이 보통인데, 지역 ‘공론’은 해당지역 주민대회가 아니라 대개 그런 간담회(혹은 그 이전에 암암리에 이루어진 관료와 유지의 담합)에서 결정되었다. 가령 교육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유지간담회(혹은 시민대회)는 대개 해당 지역 학무위원이 ‘주선’ 혹은 ‘주도’하였다. 주민 의견은 오로지 ‘유지’, 즉 ‘관료-유지 지배체제’를 매개로 해서만 반영되었다.

- 69) 일제시기 『동아일보』 기사제목을 검색하면, ‘公職者’(200건), 혹은 ‘公職者大會’(62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사가 많이 산견된다.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열린 공직자대회의 경우, ‘總辭退’를 결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 70) 한상구, 2000 『일제시기 시민대회의 전개양상과 성격』, 『전국역사학회발표문』 참조. 누차 강조하듯이, 이같은 대회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제대로 구명하려면 ‘관료-유지 지배체제’의 구성이나 작동방식(지방정치문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 71) 다른 지역의 사례이긴 하나, 雄基의 한 기사가 작성한 ‘지방논단’(『시민대회를 보고』)은 민원·진정운동 과정에서 일본인 유력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웅기 시민대회에서 ‘철도기성 동맹회’ 회장을 선출할 때 조선인 면장이 조선인 참석자들에게, “회장은 일본인으로 투표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위 기사를 집필한 기사는 이를 듣고, 처음에는 “하필 일본인 회장이라야 합니까?”하고 떠들고 싶었으나, 곧바로 조선사람 가운데는 “市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有權者”, 즉 ‘행세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雄基 一記者, 『市民大會를 보고』, 『동아일보』, 1924. 2. 5.

은 것이었다. 일제시기 강경지역의 일본인들은 민원·진정활동을 통해서, 관청(법원, 각종 공공 조합과 단체), 학교(상업학교와 보통학교), 공원과 신사, 갑문 및 운하, 도로, 주택, 전기,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을 두루 갖춘 식민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다. 특히 읍내를 관통하며 흘렀던 강경천 물길을 도시 외곽으로 돌린 뒤 갑문과 운하를 조성한 것, 그리고 치열한 로비(혹은 탄원, 진정)를 통해 1936년 520만원의 국비가 투입된 대대적인 제방공사를 완료한 것 등은 강경 거주 일본인들이 이루어낸 커다란 성과였다. 한 조사에 따르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강경 인근에서만 총 45개소에 달하는 수리시설(제방)이 설치되었다고 한다.<sup>73)</sup>

물론 조선인 유지들도 도시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sup>74)</sup> 가령, 1931년 현재 충남 도평의회원은 尹吉重(강경읍 대지주)과 西島寅吉(강경읍 대지주), 1933년 도회원은 朴在新(1931년 강경 면협의회원)과 姜永植(양촌면 도평리 대지주, 양촌면 면장 역임), 1937년 도회원은 姜永植과 裴榮春(대지주, 논산면 면장), 1941년 도회원은 武本榮一(배영춘) 등이었는데,<sup>75)</sup> 이들은 민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유지간담회나 면민대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가령, 이른바 '강경유지간담회'의 '決議'는, 지방정치의 실상('관료-유지 지배체제'의 작동방식)과 관련하여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72) 1928년 7월 정무총감어(『동아일보』, 1929. 7. 5), 그리고 1929년 4월 조선총독이 논산을 방문했을 때(『동아일보』, 1929. 4. 28), '논산 강경 유지'(논산천개수기성회)들은 줄기차게 논산 및 강경천 改修를 진정하고 탄원하였다.

73) 鄭然泰, 2003 『조선말 일제하 자산가형 지방유지의 성장 추구와 이해관계의 중층성 —포구상업도시 강경지역 사례』, 『韓國文化』31, 301-305면 참조.

74) 강경지역의 面政(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 관련 정책) 과정에서도 민족적 차별이 자주 문제시되었다(『면 당국의 등한과 조선인 시민 불평/강경면의 차별적 시설』, 『동아일보』, 1925. 9. 11). 하지만 이런 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민(면민)대회가 조직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75) 1930년대 동아일보 강경지국이나 논산지국의 고문은 윤길중, 강영식, 배영춘(이상 도의원 역임), 광해봉(의사, 해방공간에서 좌익활동) 등 논산지역의 거물급 유지들이었다. 이런 사실은 조선어 신문사 지방지국이 지방정치(유지정치)의 주요한 매개였음을 말해준다. 조선어 신문사 지방지국과 군면 단위 '관료-유지 지배체제'의 상관성(시기별 변화 추이) 문제는, 일제시기 지방정치의 특징은 물론이고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의 정치적 계선을 따질 때도 눈여겨 보아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자 한다.

1930년 4월 ‘강경 유지’ 10여 인의 발기로 개최된 ‘강경유지간담회’는 “一. 강경 부면장은 강경면민 전체의 의사로 斟酌하여 人選기를 面及郡 當局에 진정할 事, 一. 강경면 부면장은 가급적 강경 시민중에서 선임할 事, 一. 右 실행방법을 講究及 此를 실행키 위하여 昭和 5년 4월 3일 오후 2시에 中町 江景青年會館에서 市民大會를 개최할 事” 등을 결의했는데,<sup>76)</sup> 이는 대부분의 시민대회가 지역유지들의 ‘합의’에 따라 개최되었음을 보여준다. 일제시기 전국 각지에서 무수히 개최된 시민대회(면민, 군민대회)는 명실상부한 ‘公論 형성의 場’이 아니라, ‘公論’(결의 채택)이나 ‘대표역’(진정위원 선출)을 ‘詐稱’하기 위한 ‘명분 축적용 의례’인 경우가 허다했다.<sup>77)</sup> 각종 민원사건 관련 보도를 보면, ‘郡內 一般 言論’, ‘民衆의 意思’, 또는 ‘面民 不平’, ‘人民 怨聲’, ‘民怨 冲天’, ‘怨聲 藉藉’ 등의 표현이 자주 눈에 띄이는데, 이는 단순한 수사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런 기사들은 대부분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하더라’는 식으로 주민들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다.

민원·진정사건은 강경지역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논산(읍면)지역에서도, 시장 위치, 면장 유입, 보통학교 설립(입지 선정), 하천 개수, 교장의 학생 폭행, 면 폐합, 교량 설계 변경, 수리조합 설립, 악질 마름, 면장의 학원 방매 등과 관련한 민원사건들이 발생했다.<sup>78)</sup> 일제하에서 발생한 민원·진정사건은 관과 주민간의 갈등관계 때문에 발생한 것도 드물게 확인되나, 대부분의 사건은 국가자원(이른바 公共財) 배분문제를 둘러싼 지역과 지역간의 갈등 형태로 표출되곤 했다. 가령, ‘두마면 假戶稅告知書 부

76) 『江景 有志 간담회/ 副面長 후임문제』, 『동아일보』, 1930. 4. 4.

77) 1924년 1월 보통학교 증축비용 문제(호별 부과금 분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면 주최로 열린 창원군 진동면 면민대회(500여 면민 참여)는 한 기자의 참관기에 따르면, 오후 1시부터 군수 이하 다수 군청 직원들이 나와 “장돌뱅이 약장사 처럼 되지 아니한 총독정치 광고를 하기에 열중”하다가, 오후 4시경쯤에야 “동면 면장의 산업, 교육, 기타 각방면의 講話와 一同의 결의가 有하였다”고 한다. 『진동면 면민대회를 본 感想』, 『동아일보』, 1924. 1. 27.

78) 각 사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논산시지』 참조. 지방지국 기자들은 보도기사뿐만 아니라 ‘지방논단(동아일보)’, ‘지방시론(조선중앙일보)’, ‘순회탐방’, ‘지방소개판’ 등의 지면, 또는 자선봉사나 교육계몽 활동, 각종 지역행사 주최 및 후원 등을 통해서 지방정치, 특히 민원·진정활동에 깊숙이 개입했다. 각주 5)의 지헌정, 맹의섭 사례연구 참조.

정 발부 사건'이나 '성동면장 부당 사직 권고 사건' 등<sup>79)</sup>은 행정관청(군청, 면사무소)과 지역주민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1927년 5월에 발생한 논산군청 이전 관련 민원 등은 면과 면, 같은 시기 연산 공립보통학교 설립위치 관련 민원은 동리와 동리, 1933년 3월에 발생한 황산나루 渡船權 관련 민원은 군과 군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된 사건이었다.<sup>80)</sup>

이같은 민원·진정사건은 부여지역에서도 빈발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부여지역에서는, 면사무소·보통학교·시장등의 입지 선정 문제, 수리조합 설치 문제, 도로 수리(부역)문제, 곡물검사문제, 하천 개수문제, 전기요금 인하문제, 공립보통학교 학년 연장 문제 등과 관련한 민원사건이 발생했다(앞의 『부여군지』 참조). 부여군 규암면에서 발생한 학교설립 위치 문제를 둘러싼 민원사건은 우리들에게 지방정치의 또다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위 민원사건은, 1923년 규암지역의 유지청년(규암청년수양회)들이 '보통학교 설립 기성회'를 조직하면서부터 시작되어 몇차례 우여곡절을 겪다가, 1931년 학교 설립 위치 문제를 둘러싸고 面內 有志들 사이에 내분이 발생하여, 경쟁적으로 道와 총독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든가, '面民有志會(議)'를 유희이 낭자한 난투장으로 만드는 등의 추태를 보이다가, 결국은 학교 설립 자체가 무산되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sup>81)</sup>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과정을 따라 읽어가다 보면, 일제하의 지방정치(민원·진정활동, 유지정치) 실상, 달리 말하면 '식민지적 공공성'의 실체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30년에 조직되어 8년여 동안 활동한 부여 金川改修期成會는 1937년 11월 말 총공비 230만원의 대규모 개수공사 기공식을 거행하였는데, 해당 기성회 활동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보도기사는 기성회를 매개로 한 민원·진정활동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sup>82)</sup> 위 기사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 기성회 설립 당시 회장은 일본인 유지 杉三郎이었으나, 현회장은 일제시기 군수와

79) 『동아일보』, 1925. 12. 1 ; 1926. 1. 11. 두마면 사건의 경우 '洞民大會'가 열리기도 했다.

80) 『동아일보』, 1927. 5. 21 ; 『동아일보』, 1927. 5. 6 ; 『동아일보』 1933. 3. 8 등 참조.

81) 扶餘 一記者, 『(지방논단) 부여군 당국의 무책임 — 言명한 위치에 설정하라.』, 『동아일보』(1931. 7. 2) 참조.

82) 『동아일보』, 1937. 11. 26 ; 1937. 12. 4.

도평의회원 등을 역임한 池喜烈이었다는 점 △ 기성회의 주요 구성원은 해당 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부여군 내의 유력 지주들이었다는 점 △ “8년 동안 3천여 원의 비용을 들여 要路 當局에 대한 탄원 혹은 주의를 촉하며 또는 일반의 여론을 환기하여 동정을 구하는 등 장구한 시일을 한결같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 △ 기공식과 축하회에 총독부 내무국장, 충남도지사 등 관민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는 점 등인데, 대부분의 기성회는 이같은 형태와 내용으로 민원·진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1937년 12월 부여군 구룡면사무소 위치를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민원사건은 지역 여론의 형성 주체가 대개 해당지역 ‘유지’(공직자)들이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면내 각리 구장, 구룡면협의회원, 기타 유지 등은 廳舍新築期成會(위원 20명)를 조직한 뒤 일체 권한을 위임받았는데,<sup>83)</sup> 여기서 말하는 公論이란 기성회 구성원들의 ‘담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물론 지방제도 개정(자치권 및 참정권 확대)이나 공공재 배분을 둘러싼 민원·진정활동을 ‘식민지 공공성의 확대(公論 造成)’ 과정이라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형성된 ‘공공성’은, ‘관료-유지 지배체제’의 구성이나 작동방식, 각종 정치적 사건이나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구명하지 않고는 그 역사성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가령, 민원·진정사건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사건이, 민원 발생 → 유지(공직자) 간담회 개최(관료와 유지 간의 담합이나 뒷거래, 사이비 ‘공론’ 확정) → 기성회 조직 및 시민대회 개최(결의 및 진정위원 선출) → 각급 기관(군, 도, 총독부, 일본 정계 요로) 진정 및 탄원, 고위 관료를 상대로 한 로비와 뒷거래(뇌물, 향응) 등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일부 사건의 경우 집단적인 폭력시위가 발생하거나 경찰의 탄압으로 주민대회가 무산(금지)되는 경우도 있었다.<sup>84)</sup> 하지만 대부분의

83) 『동아일보』, 1937. 12. 24.

84) 관청과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 때문에 대회가 소집된 경우, 또는 혁신청년(청년회) 등이 대회를 주도하는 경우, 자주 경찰이 나서서 대회 자체를 원천봉쇄하곤 했다. 예를 들면, 『안성 경찰서 면민대회를 금지/ 청년회가 준비하는 중에 돌연 금지/ 安城川 堤防 賦役 問題 後報』(『동아일보』, 1925. 6. 1) 등의 기사는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주민대회는 관료와 유지(공직자)들 간의 담합에 의해서 조직되었다. 이런 대회의 경우, 주민들은 일종의 동원된 들러리일 뿐이었다.

그러면 혁신청년집단은 이같은 민원·진정활동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 문제를 따질 때 먼저 유념해야 할 점은, 첫째, 대부분의 민원진정사건은 총독부권력과 주민 사이의 갈등이라기보다는 국가자원(공공재) 배분문제를 둘러싼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인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 둘째 그 성패는 다른 무엇보다 해당 지역내에 '행세하는 유지'(특히 '當局信用'을 가진, 특히 일본인 유력자)가 얼마나 많은가(이른바 '유지정치' 역량)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사실, 셋째, 이같은 체제내적 성격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은 총독부권력의 '善處'(一視同仁의 恩惠)에 호소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등이다. 주지하듯이, 일제하의 혁신청년집단은 일제의 조선 지배, 더 나아가서는 식민지 조선사회(식민지 반봉건사회, 혹은 자본주의 사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원·진정사건의 경우, 특히 국가자원배분 문제를 둘러싼 민원·진정사건의 경우는 개입하면 하면 할수록 일제의 조선 지배를 인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혁신청년집단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각종 민원·진정사건에 소극적이거나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가령 동아일보사는 1930년 9월 19일부터 1931년 4월 23일까지 31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誌上座談會(主要都市巡廻座談)'를 개최했는데,<sup>85)</sup> 신간회 회령지회 대표로 좌담회에 참여한 張順明(會寧共產主義者同盟事件 關聯者)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양 집단 사이에 존재했던 견해(계급적 관점) 차이를 잘 보여준다. 장순명이, "여기서 發展이라 운운함은 즉 자본주의적 도시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자체 내의 矛盾은 회령의 자본주의적으

85) 주요 참석자는, △ 상공업 및 금융업(식산은행 지점 관련자) 관련자 △ 금융조합 농회 등 각종 공공조합(회사) 간부 △ 도평의원, 면협의원, 학교평의원 등 해당지역 공직자, △ 해당지역내 각급학교 관련자(교사, 교장) △ 일부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 신간회 지회 간부 등이었으며, 주요 의제는 상공업발전, 도시기반시설(도로, 철도, 상하수도, 전기시설) 확충, 각급 학교 증·신설 문제 등이었다. 신간회 지회가 없는 도시(31개 중 절반 이상의 도시)는 필자가 말하는 이른바 '유지'들만 좌담회에 참여했으며, 청년동맹이나 농민조합 간부가 좌담회에 참가한 경우는 각각 2건뿐이었다.

로의 발전에도 모순을 남기게 됩니다”라는 취지로 여러 참석자들의 논의(회령 발전책)들을 밀뿌리부터 부정하자, 좌담 사회자인 동아일보 회령지국장은, “장 선생 말씀은 자본사회의 모순과 더 발전의 가능성 없음을 보여준 것이지만은 여기서 現制度하에서 다소라도 유익한 점이 있을까 하는 소극적인 발전책을 운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은 요컨대, 소공업을 일으키며 농촌을 진흥시키며 상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회령사람의 자각과 단결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지요”라고 마무리 발언을 한 뒤 좌담회를 서둘러 종결지었다.<sup>86)</sup> 이런 양상은 사회운동 단체 대표가 참여한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도 종종 확인된다. 대부분의 혁신청년들은 어떤 사안(지역 민원)을 논할 때면, ‘무산자의 계급적 입장(이익)’을 굳건히 견지하였다.<sup>87)</sup>

물론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의 政治的 界線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에는 ‘유지’와 ‘유지청년’이 민원·진정활동을 함께 전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예를 들면, 총독부권력이나 지주를 상대로 발생한 민원사건의 경우 1920년대에는, 지역사회운동(청년 및 농민단체) 단체가 먼저 나서 면민대회나 군민대회, 또는 농민대회나 소작인대회를 개최하는 등 민원 해결에 앞장 섰다.<sup>88)</sup> 하지만 1930년대의 경우에는 그럴 이유도 없었고(사상 노선의 차이), 또 그럴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당국신용 부재).

86) 『동아일보』, 1930. 12. 6.

87) 총독부의 농업창고설립계획에 대해 진주농민조합 간부 趙佑濟가, “우리 무산자에게는 하등의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국가완화상에도 아무 소득이 없는 사업”이라 규정한 것(『동아일보』, 1930. 11. 17), 또는 순천농민조합 간부 李榮敏이 각종 산업발전책을 평하면서, “현하의 상태로 보아서는 토지점병과 자본집중을 俗成계 하는 반면에 다수의 민중에게는 실업, 도산, 이산 등 참상을 연출하는 경향이 적지 아니”하다 주장한 것(『동아일보』, 1931. 1. 29) 등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88) 1920년대 전반기 함남지역에서 자주 조직된 ‘住民(군중)大會’는 당시의 신문보도에 따르면, 일종의 ‘人民大會’이자 ‘민중의회’였다고 한다. 1923년 8월 함남도민대회가 개최되자 동아일보는 사실(『咸南 道民大會의 성립 -民衆議會의 先驅』)을 통해 당시 각지에서 열린 郡面 단위의 住民大會를, ‘과거에 산발적 우발적으로 열린 민중 자체의 자발적 會集’과는 그 성격이 구별되는 ‘계획적 목적 의식적인 인민대회’라고 그 성격을 규정한 바 있다(『동아일보』, 1923. 8. 29). 하지만 군면 단위 ‘관료-유지 지배체제’가 형성 발전되면서, 공개적(합법적)인 주민대회는 대부분 지배체제 내부로 흡수(포섭)되는 과정을 거쳤다.

## 3) 사상선도활동

1930년대 초반은 민족해방운동의 두 번째(첫 번째는 3·1운동 직후 시기) 고조기였다. 이 시기 전국 각지에서는 민중들의 생존권 옹호투쟁(소작쟁의, 노동쟁의)과 더불어 각종 비밀결사운동(혁명적 농조·노조운동, 지역전위정치조직 결성, 당재건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광주학생운동'이나 '독서회운동' 등을 통해 의식화된 청년학생들이 '생산 현장 진출활동(농촌으로, 공장으로!)'을 본격화하자, 조선의 농촌사회 곳곳에서는 농민들을 의식화(야학활동)하고 조직화(농민조합 결성)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혁신청년이란 명이라도 존재하는 동리에는 거의 예외 없이 '민중(노동·농민)야학'이 조직되었는데,<sup>89)</sup> 야학운동은 일제시기 가장 대중성 있는 지역사회운동이었다. 1930년 5월 논산군의 야학활동가들은 '군내 야학생 연합 대운동회'를 개최하기 위해 20개의 야학에 운동회 개최 사실을 통지했는데, "미처 통지를 보(내)지 못한 학원도 많이 참가하기를 바란다"는 구절로 미루어 보면,<sup>90)</sup> 그보다 더 많은 야학이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31년의 농민운동 개관」<sup>91)</sup>에 따르면, 1931년 한 해 동안 농조 결성투쟁, 소작 쟁의, 수세 불납투쟁, 수리조합 반대운동, 부역 반대투쟁 등에 참여한 농민 수는 대략 42,800여 명(피검자 1,838명)에 달했다고 하는바, 이들 사건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혁신청년들에 의해 주도된 것들이었다.

사정이 이러하자, 총독부는 1931년경부터 강력한 '농촌통제정책'과 더불어 '사상선도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좌익운동의 확대 강화, 특수하게 新幹會·靑總을 중심으로 한 解消論의 전개 등에 대응하여 극좌적 경향을 저지하고 운동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方策 如何」라는 총독부 경무국의 질의에

89) 줄저, 『일제하 농민조합운동 연구』 참조: 일제시기 전국 각지에 설립된 야학 수는 4만여 개, 학생수는 대략 연인원 3백만 명 정도였다. 최근식, 1992 『일제시대 야학운동의 규모와 성격』,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참조. 위 연구에 따르면, 1931년 현재 함경남도에는 2,700여 개의 야학(함남의 전체 동리 수는 2,941개)이 활동하고 있었으나, 1931년 말부터 본격화한 경찰과 지역유지들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1935년 현재는 365개의 '온건 착실'한 야학만이 명맥을 유지했다고 한다.

90) 『중외일보』, 1930. 5. 31.

91) 『조선일보』, 1932. 1. 1-1932. 2. 28.

대한 각도 경찰부장의 답신 내용은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탄압'(금지와 엄벌)과 '선도'(개량화와 관제화)를 병행하는 것이었다.<sup>92)</sup> 이같은 전략은 1933년 들어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그 핵심은 '농조'와 '야학'을 해체<sup>93)</sup> 시킴과 동시에, 각종 '振興對策'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특히 1934년경부터 각종 비밀결사사건 피의자들이 속속 만기출옥하자, 지방 경찰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핵심은 전향할 가능성이 있는 자는 '선도'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엄벌'하는 것이었다.<sup>94)</sup> 예를 들면 혁명적 농조운동이 활발했던 명천·길주·성진지역에서는 이른바 「(함북 남부지역 3개 군)南三郡 思想淨化工作」이라는 거의 '공작' 수준의 탄압을 행하기도 했다.<sup>95)</sup>

야학과 농조를 탄압하는 정책은 부여와 논산군에서도 실시되었다. 특히 이들 지역의 경우는 각종 비밀결사사건의 주도자들이 대부분 야학 지도자들이었던 까닭에 야학에 대한 경찰의 탄압은 개량적인 야학까지 포함한 거의拔

92) 朝鮮總督府警務局, 1931 『道警察部長會議諮問事項答申書』, 줄고, 『일제하 농민조합운동 연구』, 66-67면 참조.

93) 『동아일보』 1933년 4월 20일자 기사(「私設講習所와 農民組合 大整理/ 閉鎖와 善導의 兩刀로 處斷/ 總督府의 最後 斷案」)에 따르면, 총독부의 '농촌통제'와 '사상선도'를 위해 △ 강습소 877개, 서당 8,864개 가운데 '학술강습을 병자하고 주의 보급에 열중'인 강습소는 강제 폐쇄하고 나머지는 보조금을 주어 관제화하는 정책 △ 농민조합은 1천 1백여 개, 가입자는 2만 5천명인데, "다수가 주의적 색채를 띠었고, 그런 색채가 없더라도 단결의 힘으로 현사회제도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이 많으므로 불온한 자는 단연 해체를 명령하고, 해산시키지 않고 선도할 가능성이 있는 자는 농무국과 협력하여 농촌진흥운동으로 방향을 전환케" 하는 정책 등을 실시했다고 한다. 총독부권력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서, 농촌진흥운동기에 자연촌락을 단위로 '農村振興會'와 '振興夜學'을 설립했다.

94) "즉 사상이 전향할 만한 피의자와 범죄사실이 박약한 사람은 경찰에서 미리 그 사상을 교정토록 하여 검거 송국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준엄한 처벌을 할 작정". 「현재 취조 받는 사상범 全朝鮮에 천여명/ 전남에 육백, 강원, 함남·북에 각각 백여명/ 사상선도 대책에 부심」, 『동아일보』, 1934. 6. 19.

95) 1936년 한 해 동안 함북 남부 3개 郡에서 검거된 혁명적 농조사건 관련자(총 검거인원)는 무려 1,647명(검사국 송치인원 786명, 기소인원 429명)이었다. 사태가 이러하자, 함북 경찰은 해당 지역의 '유지'나 '끄나불'들을 총동원하여 '사상정화 공작위원회'와 '自衛團'을 조직하였다. '淨化'는 '善導'보다 더 공세적이며, 폭력적인 사상대책이었다. 출처 『일제하 농민조합운동 연구』, 300-304면 참조.

本的인 수준이었다. 『동아일보』 1931년 10월 3일자 기사(「(江景時話) 兩夜學閉鎖」)에 보이는, △ 4년 전 ‘지방유지’의 원조와 ‘商務會’, ‘郡鄕校’, ‘邑當局’의 후원으로 ‘자라오던’ 두개 야학이 군 당국의 인가가 없다는 이유로 군 경찰로부터 돌연 폐쇄 명령을 받았다는 대목 △ 하지만 “그 眞因을 군수로부터 들으면 인가가 없다는 것보다도 지도자가 주의 인물이니 자미 없다는 경찰당국의 말썽이 있어서 그리한 것이라”는 대목 등은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야학 탄압은 결코 총독부 관료기구(경찰기구)만을 매개로 실행된 것이 아니었다. 이때에 이르면 야학활동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지방유지들조차도 경찰의 ‘지시’(명령)하에 (민중) 야학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적극적으로 이를 탄압하는 책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야학이나 농조를 탄압하는 활동 이외에 총독부는 ‘사상 선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유지집단의 역량이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충청남도에서 사상선도기관이 조직된 것은 1935년 말경이었다. 이때 충남경찰은 경찰서장(위원장), 군수, 군내무주임, 서무주임, 각 관공서 소장, 기타 유력자들을 중심으로 사상선도기관(위원회)을 조직했는데, 「사상선도기관 활동상황」에 따르면, 사상선도기관에는 상임이사, 이사, 사무간사를 둘 수 있었으며, 수시로 위원회나 이사회를 개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상선도기관은 엄밀하게 말하면 ‘기관’이 아니라 경찰이 주도하여 조직한 일종의 ‘관민 협동 위원(회)’였다.<sup>96)</sup> ‘사상선도위원 규정·규칙’에서 주목되는 조항은, “(제1조) 사상 선도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각각의 경찰서에 사상선도위원을 둔다”는 것인데, 선도기관이란 각군 경찰이 ‘임명’한 ‘사상선도위원’에 다름 아니었다. 「사상선도기관 활동 상황」을 토대로 사상선도위원의 구성이나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촌락이나 군면 단위에서 ‘관료-유지 지배체제’나 유지집단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사상선도위원 규정·규칙’ 제2조는 사상선도위원의 구성과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위의 규정은 사상선도를 위해 ① 직업의 소개 및 취직 알선 ② 사업 또는 생산자금 알선 ③ 영업 허가, 기타 편의 제공 ④ 해당 검

96) 부여경찰서는 1938년 5월 사상선도위원회를 상설조직인 明鄕會로 개편하였다. 『동아일보』, 1938. 5. 7.

사의 依囑에 의한 보호자 없는 자의 인수 ⑤ 재감 중에 있어서의 差入 ⑥ 금품을 대여하여 家鄕에 歸住시키는 것 ⑦ 身上 萬般의 상담 ⑧ 가족 및 이웃과 被疑者와의 融和 ⑨ 기타 경제적 원조를 주는 사항 ⑩ 婚姻의 媒介 ⑪ 復校 및 再就學의 알선 등을 수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데, 위에 명시된 활동들은 당연히 해당 지역 '有志'들의 몫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위의 규정 제6조에 보이는 "필요한 비용은 篤志家の 기부"에 의존한다<sup>97)</sup>는 대목은 사상선도위원이 아닌 유지(자산자)들도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와 내용의 비용을 분담했음을 보여준다.<sup>98)</sup> 논산군의 경우, 민간인 유력자 135명(조선인 70명, 일본인 85명)이 대략 1만 원 가량의 선도자금을 거출했다.<sup>99)</sup>

<표 6> 사상선도위원의 구성 및 선도자금액

	관공리	민간인 유력자	일본인	조선인	전체 위원수	선도자금 총액	대부자금액
논산	20	135	85	70	155	10,365	대부중
부여	16	50	28	38	66	4,365	90
청양	16	35	18	33	51	3,525	650
예산	26	39	25	40	65	1,316	700

97) 앞의 「忠淸南道下の思想概況並同道論山・夫餘・靑陽・禮山及唐津郡各思想善導機關の活動狀況」, 34면.

98) 예를 들면, 전남 화순군 동북면 대지주 吳建基는 1937년 현재 면협의회의원, 군농회 특별위원, 군소자위원회 예비의원, 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 여고보 후원회 간사, 세무서 所轄 소득조사위원, 소방협회 도지부 평의원, 결핵예방협회 군지부 평의원, 도감중조합 평의원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1939년 3월부터 1940년 4월까지 ① 神社 建築 寄附金 ② 警察署 義勇團 寄附金, 奉獻木代 및 奉贊會費 ③ 村道期成會 寄附金 ④ 軍事後援會 寄附金 ⑤ 志願兵 寄附金 ⑥ 愛國婦人會 篤志 寄附金 ⑦ 日本赤十字社 寄附金 ⑧ 靑年訓練生 寄附金 ⑨ 思想聯盟支部 贊助金 ⑩ 皇軍 慰問金 ⑪ 國民總力昂揚大會 ⑫ 寄附金 ⑬ 忠魂塔 設立 海事協會 寄附金 ⑭ 消防組 寄附金 등의 명목으로 무려 1만여원의 현금을 지출했다. 1939년 현재 오건기가 지세, 제3종소득세, 호별세, 동부가세(面賦課金)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모두 9천여 원 정도였다. 洪性讚, 1922 『韓國 近代 農村社會의 變動과 地主層 — 20세기 전반기 전남 화순군 동북면 일대의 사례』, 지식산업사, 116면, 264-268면.

99) 1936년 현재 현미 상품 석당 가격은 28원, 중등지 논의 反當 가격은 140원 정도였다.

당진	38	27	32	33	65	1,654	600
합계	116	286	188	214	402	2,1228	2,040

# #. 「忠淸南道下의思想概況竝同道論山・夫餘・靑陽・禮山及唐津郡各思想善導機關의活動狀況」, 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思想彙報』第9號, 昭和十一年十二月, 36 - 39면.

그러면 사상선도의 대상이 되었던 이들은 누구였을까? 당시 충남지역의 사상선도 대상 인물은 모두 24명이었는데, 이들의 신상을 밝히고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 ① 實刑 與否: 실형 4명, 형집행유예 6명, 기소유예 1인, 기타 11명 ② 年齡 分布: 20 - 30세 12명, 30 - 40세 9명, 40세 이상 3명 ③ 善導 方法: 가정 위문 1건, 취직 알선 7건, 자금 대여 11건, 소작지 알선 1건, 부업기 대여 3건, 복고 알선 1건 ④ 對象者의 思想: 공산주의자 17명, 민족주의자 6명, 무정부주의자 1명 등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100)</sup> 이런 사실은 앞서 언급한, '가능성이 있는 자는 선도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엄벌한다'는 전략이 충남지역에서도 실천되었음을 보여준다. 당시 경찰이 중시했던 우선 선도 대상은, 집행유예나 그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빈곤한 청년'들이었다.<sup>101)</sup>

#### ○ 논산군 선도 사례 요약

〈양촌면 인천리 張日煥〉 치열한 의식을 소유한 공산주의자, 1934년 12월 치안유지법위반혐의로 검거돼 전주지법에서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자, 경찰서장 가장 방문하여 위문 위로하자, 장일환 감격, 아직 전향하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에 예상됨.

〈성동면 개척리 趙南錫〉 일본 유학 중 공산주의 심취, 京都 방면 적색구원회(모플) 활동, 상당한 투쟁경력 보유자, 군청에 취직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사상 선도, 온건 착실해지고 있음.

〈강경읍 금정 韓禹錫〉 1921년 11월 경성지법에서 강도예비 및 제령 위반죄로 8년 복역, 1930년 3월 강도상해죄로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0년형 선고, 복역 중 1936년 3월 나병으로 형집행정지 처분, 극빈 생활, 선도자금 100원 대여.

〈강경읍 영정 片顯甲〉 농후한 민족의식의 소유자, 뒤에 공산주의자가 되어 불은

100) 앞의 「忠淸南道下의思想概況竝同道論山・夫餘・靑陽・禮山及唐津郡各思想善導機關의活動狀況」, 47-48면.

101) 자금융통은 무담보 연대보증의 형식(그 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을 전임지도원으로 지정했다), 이율은 2푼에서 5푼, 변제는 연부상환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취직 알선의 경우는 선도위원이 대상인물의 신원보증인이 되어 민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한 언동을 일삼음, 생계 곤란, 생계 보조를 목적으로 1936년 10월 '紹介業 許可' 부여.

○ 부여군 선도사례 요약

〈남면 송학리 許元龍〉 1933년 12월 부여군 농촌적화비밀결사(협의회) 사건 관련자, 1935년 6월 공주지법 예심 免訴, 상당히 詭激한 사상의 소유자, 많은 부채 때문에 유일한 재산인 가옥까지 저당 잡힘, 소작지 알선, 가옥에 대한 저당 해제 등 생활안정 통한 선도 노력.<sup>102)</sup>

〈홍산면 북촌리 張昌善〉 협의회사건 관련자, 기소유예 처분, 생활 궁핍, 사상 위험, 1936년 9월 홍산면 소재 鴻業金山의 火藥出納 主任(월수 30원)으로 취직 알선.

〈홍산면 조현리 金壬成〉 협의회사건 관련자, 예심 免訴, 1936년 6월 홍산 수리 조합 水路 看視員(일급 80전)으로 취직 알선, 사상 완전 정화, 1936년 10월 面書記 筆記試驗 합격.

〈홍산면 조현리 李戶喆〉 협의회사건 관련자, 징역 1년 6개월에 5년간 형집행유예 선고, 재판 과정에서 사상전향, 연초소매 및 음식점 영업 허가.

〈장암면 장하리 姜聖模, 姜秉國, 姜柱求〉 협회회(칠모회)사건 관련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농업 종사, 위 3명에게 副業 알선 명목으로 가마니틀 1대 기부.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부여와 논산군의 사상선도 대상자는 각 지역의 주요 활동가(장일환, 이호철)나 빈곤한 청년들이었으며, 선도 활동은 대개 군면 단위의 '관료-유지 지배체제'를 매개로 전개되었다. 특히 장하리 청년들에 대한 사상선도 사례는 농촌진흥운동기 농가갱생 성공사례들과 그 내용이 흡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령, 『農山漁村振興功績者名鑑』(1937)에 등장하는 갱생성공 사례를 분석하면, 행정관청이나 경찰, 또는 유지나 금융조합의 선처(저리자금 대부, 소작지 제공, 토지구입 알선)로 갱생한 사례가 여럿 보이는데,<sup>103)</sup> 이런 양상은 장하리의 선도사례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102) “차제에 선도를 행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믿어져 1936년 3월 이래 畝 6두락 반, 田 4두락의 소작지를 알선 취득케 하고 더욱이 선도자금 중 90원을 그에게 대여하여 가옥에 대한 저당권을 제거하는 등 오로지 그 생활안정의 길을 강구하여 그의 선도에 노력하고 있다.”(앞의 자료, 41 - 42면)

103) 줄고, 1984 『1932-1935년간의 조선농촌진흥운동』, 『한국사연구』 46호, 136면 참조. 충남지역의 마을진흥회 활동에 대해서는 김영희, 『일제시대 농촌통제정책 연구』(경인문화사, 2003) 제2부 『충청남도의 농촌통제정책의 양상과 지역유지의 활동』을 참조할 것. 논산군 광석면 갈산리 진흥회는 현직 면협의원이었던 방중구에 의해서 지도되었다.

## 5. 해방공간의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

일제하의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은 일제시기뿐만 아니라 해방공간에서도 뚜렷이 구별되는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 요컨대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은 일제하에서 축적한 나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해방공간에서 우익운동(대한독립촉성회 군지부 활동, 한민당 활동)과 좌익운동(군 인민위원회 및 농민조합운동, 조선공산당=남로당 활동)을 이끌었는데,<sup>104)</sup> 그 매개는 우익의 경우는 ‘유지정치 과정에서 형성된 공직기구나 유지단체와 같은 네트워크’, 그리고 좌익의 경우는 ‘농조(지역전위 정치조직, 당재건 조직)나 야학활동 과정에서 형성된 네트워크’이었다. 물론 지역사회운동이 미약했던 지역, 즉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의 정치적 계선이 불분명한 지역에서는, 초기 시기 양 집단의 차이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미군정이 인민위원회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 ‘贊反托(미소공위) 政局’이 조성되면서, 양자 사이의 정치적 계선은 점점 더 분명한 형태로 벌어지기 시작했다.

### 1) 유지집단과 우익정치활동

해방과 동시에 부여와 논산군에도 건국준비위원회나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sup>105)</sup> 하지만 1946년 초반에 이르면 미군정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104) 졸저, 1994 『일제하 농민조합운동연구』, 역사비평사 참조. ‘전국인민대표자대회’(1945. 12. 8)나 ‘전국농민조합총연맹결성대회’(1945. 11. 20 - 22)’에 참여한 지역대표 가운데는 일제시기 지역사회운동(특히 혁명적 농조운동이나 당재건 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이 많았다. 이는 혁신청년집단 나름의 네트워크가 해방공간까지 유지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105) 커밍스의 연구에 따르면, 충남지역에 미군 군정중대가 진주한 것은 다른 지역보다 늦은 11월 초순경이었다. 당시 충남의 모든 군에는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행정과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잘 짜여진 교통통신망 덕택에 군정중대는 큰 어려움 없이 치안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1945년 가을 충남 서북부지역의 몇몇 군에서 ‘폭동, 교란 및 군정에 대한 저항’이 있었으나 다른 군들은 비교적 순조롭게 ‘군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B. 커밍스(김자동 역), 1986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417-423면 참조.

그 위세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忠南地域特別調査報告書』(1945. 3)에 따르면 1946년 2월 이전에 부여와 논산군의 행정기구와 경찰기구는 이미 해방 이전의 관료나 경찰, 또는 공직자들에 의해 장악된 상태였다. 1946년 2월 현재 △ 부여군수는 김기정(金箕貞, 52세, 중학교 졸업, 해방전 광산지배인, 관리 경력 없음), 내무과장은 나상원(羅相元, 45세, 중학교 졸업, 해방전 아산군청 주임), 산업과장은 천태식(千泰植, 39세, 중학교 졸업, 해방전 관리) △ 부여경찰서 서장은 鄭仁煥(34세, 중학 졸업, 해방전 도경찰부, 현재 警視補), 조사과장은 鄭泰文(37세, 소학 졸업, 해방전 대전경찰서 근무, 현재 경시보), 수사과장은 朱炳澤(41세, 소학 졸업, 해방전 부면장, 현재 경시보) 등이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관료 출신들이었다.<sup>106)</sup> 이런 사정은 논산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해방 직후 논산 군청은 이른바 ‘불량 청년’들에게 접수되었으나, 군정중대가 논산에 진주하면서 통치기능이 곧바로 회복되었다는 것이다.<sup>107)</sup> 1946년 초 논산군청 근무자는 90여명이었는데, 군수는 都相奎(63세, 한학자, 서당 훈장, 3·1운동 가담),<sup>108)</sup> 내무과장은 盧殷燮(44세, 도관리, 군서기 출신), 산업과장은 金養鉉(45세, 군속, 前부여군청) 등이었다. 강경경찰서는 해방 직후 ‘불량 청년’들에게 일시적으로 접수되었으나, 현직 경찰들이 출근하면서 서서히 치안기능을 회복해갔다고 한다. 당시 경찰서장은 梁在德(48세, 前 도보안과장), 총무과장은 姜南熙(39세, 도경찰부 근무), 보안과장은 朴勤和(42세, 논산면 주재소 근무), 수사과장은 宋寅性(38세, 조치원 경찰서 근무) 등이었다.

106) “해방 이후 신군수가 착임하여 각 면장을 새로 임명하는 등 신국가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이 지방의 인공세력(人共勢力: 인민위원회 세력) 가운데는 도덕 불량자가 많다. 악행동과 악선전으로 행정관료와 주민을 이간시켜, 자체적으로 행정기관을 수립하려고 군청을 침입하고 습격을 하였으나, 결국 그 목적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도피한 사람들도 있었다. 현재까지도 행정운영이 곤란하고 지도가 행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질분자의 소행도 다소 보인다. 군청 직원 사상은 비교적 온건한 편이며, 치안도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앞의, 『忠南地域特別調査報告書』).

107) 회고에 따르면, 1945년 10월경 논산군 인민위원회(당시 위원장 조동순, 부위원장 서홍선)는 논산군수(정낙훈)를 참석시킨 가운데 정식으로 군청 접수식(인수인계식)을 거행했다고 한다.

108) 회고에 따르면, 도상규는 영명학교 교사 출신으로 당시 충남도지사였던 황인식의 스승이었다고 한다. 도상규가 논산군수를 역임한 것은 순전히 이같은 연줄 때문이었다.

〈표 7〉 부여군의 우익계 정당·사회단체 현황

단체명	회원수	소재지	주요간부	연령	학력 및 경력
독립촉성부 여협의회	30명	읍내리	회장 南宮炫	38세	대학 졸업
			부회장 金鐵洙	40세	와세다대 전문부 졸업
			총무부장 崔榮哲	39세	중학 졸업
			선전부장 朴佑熙	32세	중학 졸업, 기독교신자
			조사부장 朴秉良	38세	중학 졸업
부여독립촉 성청년회	400명	읍내리	회장 千炳万	35세	독립운동가
			부회장 金芝山	30세	
			총무부장 黃*	26세	
			조직부장 李善陽		
			선전부장 南宮格		

##. 『忠南地域特別調査報告書』(1945. 3)[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 1996 『美軍CIC情報報告書(Ⅰ)』  
所收] 참조 작성.

미군정이 행정 경찰기구를 장악하자 부여와 논산지역의 유지집단은 혁신청년집단의 정치활동에 대항하여 각종 우익정치단체를 결성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영향력이 컸던 것은 '독립촉성 중앙협의회계(독촉계)' 단체들이었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부여군의 우익단체들은, "일치단결하여야 완전 자주 독립의 파생적 대립을 초월하여 융합을 도모하며 각자 자기의 직분을 다하여 국가의 동량으로서의 능력"까지 보일 정도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독촉계 청년회는 활동도 활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활동가도 극소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여독촉 청년회 회장인 천병만은 임시정부의 지시로 독립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입국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옥살이를 한 인물로서,<sup>109)</sup> 출옥 이후에는 향리에서 조선중앙일보 부여지국 기자 등을 역임했다. 해방 이후 천병만은 우익청년단체(민족청년단, 대한청년단) 간부와 부여면장, 치안대장 등을 역임했다. 독촉 부여협의회 부회장이었던 김철수는 제헌의원 선거에서 부여군 인민위원회

109) 천병만은 3·1운동 직후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 활동을 전개하다가 1943년 중국땅에서 순국한 千炳一의 동생이다. 천병만은 그의 형의 비밀지령에 따라 1937년경 조카인 千瓏(병일의 아들)과 千龍九, 金鍾大 등을 朝鮮軍官學校에 입교시켰다고 한다.

위원장 출신인 이호철을 누르고 제헌의원에 당선되었다.<sup>110)</sup>

〈표 8〉 논산군의 우익계 정당·사회단체 현황

단체명	회원수	소재지	주요간부	연령	학력 및 경력
독립촉성논산협의회	180	논산읍	회장 尹珩重	46	중학, 기독교 회장
			부회장 陸完國	34	대학, 의사
			총무부장 沈相殷	38	중학, 상업조합 이사
			선전부장 朴昌來	40	중학, 천주교인
			조사부장 尹政	40	중학, 신문기자
대한독립촉성 논산청년회			회장 金鍾實	30	소학, 무직
			부회장 林順植	24	중학, 기독교인
			부회장 金武鎔	32	중학, 수리조합
			총무부장 李甫炯	31	중학, 상업
			선전부장 柳興善	28	소학, 무직
논산의용단	50	논산읍	위원장 金鍾秀	23	중학, 귀환병
			부위원장 吳鍾彥	23	중학, 귀환병
			총무부장 奇在洙	23	중학, 귀환병
			선전부장 金甲東	21	중학, 귀환병
논산부녀회	400	논산읍	회장 劉桂順	40	
			부회장 金*永	41	
			총무부장 柳萬熙	35	
			조직부장 李東順	35	

# #, 『忠南地域特別調査報告書』(1945. 3)[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 1996 『美軍CIC情報報告書(Ⅰ)』 所收] 참조 작성.

논산군의 경우는 부여군보다 유지집단의 활동역량(정치적 자원과 네트워크)이 강력했으므로 여러 계통의 우익단체들이 조직되는 등 상대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편이었다. 위의 자료에 따르면, 독촉 논산협의회와 청년회는 고적대를 앞세우고 각면을 돌면서 시국강연, 뼈라 살포, 기초 군사훈련 등을 전개했다고 한다. 독촉 논산협의회 회장이었던 윤행중은 일제시기 상업활동(명태

110) 부여군의 제헌의회 선거는 독촉 회장과 부회장 출신이 갑구와 을구에서 동반 당선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도매업 등)을 통해 거부를 축적한 인물인데,<sup>111)</sup> 독촉계 논산청년회 회장이었던 김종실은 그의 수하(심부름꾼)였으며, 부회장인 임순식은 그의 사위, 논산 부녀회 회장인 유계순(전직 교사)은 그의 처였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논산에서 가장 활동적인 우익인사는 육완국(의사 출신)이었다. 그는 강경 호남병원 원장인 정진국의 사위로서, 전쟁 후 도의원을 역임했는데, 그의 ‘물주(후견인)’는 성동면 대지주 尹夔炳(1932년 현재 248정보 소유, 일제시기 면협의원 등 다수 공직 역임)이었다. 『忠南地域特別調査報告書』는 우익단체 간부를 소개할 때, 학력·경력과 더불어 특별히 기독교인(교회 지도자)인가 아닌가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주 영명학교 출신들이 충남도청(도지사 黃仁植)의 요직과 각군 군수직을 거의 독식한 상태였기 때문이다.<sup>112)</sup> 논산군의 거물 유지인 윤길중, 박재신, 강영식, 배영춘 등은 과거의 친일 경력(도의원 등 역임) 때문에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설 수는 없었으나, 윤기병처럼 막후에서 뒷돈을 대는 등 그 나름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고 한다. 논산지역의 우익단체 활동가들은 도의원급의 거물 유지는 아니나 일제시기부터 상당한 ‘유지기반’을 축적하고 있었던 인물들이었다. 독촉 논산협의회 선전부장인 박창래는 1938년 4월 동아일보 논산 지국장<sup>113)</sup>을, 조직부장 윤정은 신문기자를 역임했던 인물이다.

## 2) 혁신청년집단과 좌익정치활동

부여군의 좌익정치활동은 이호철, 강성구, 오기영, 전영철(田泳哲) 등 대부분 ‘협의회사건’ 관련자들이 주도했다. 하지만 부여의 좌익단체들은 미군정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1946년 초반경부터 약세를 면치 못했다. 『忠南地域特別調

111) 윤행중은 감리교 계통의 교회 지도자(장로)였다. 전쟁 전 논산읍장을 역임했던 윤행중은 전쟁 이후 민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당시 논산지역에서는 “더 믿어라, 윤행중”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다고 한다.

112) 하지중장의 정치비서였던 윌리엄스 중령은 영명학교 설립자인 윌리엄스 목사의 아들로서, 공주에서 태어나 17세까지 공주에서 생활했다(줄고 『서덕순 사례연구』 참조). 『忠南地域特別調査報告書』(1945. 3)에 따르면, 독립축성 충남지부의 회장인 南天祐도 공주 영명학교(감리교계 학교) 출신이었다고 한다. 윤행중, 임순식, 이보형(부친이 목사였다고 함) 등도 감리교 계통의 교회 지도자였다.

113) 『동아일보』, 1938. 4. 12.

査報告書』(1945. 3)에 따르면 부여지역의 좌익단체들은 군민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지하활동만으로 근근이 명맥을 이어가는 형편이었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은 이른바 ‘찬반탁 정국’ 과정에서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부여지역의 좌익들은 조선공산당의 지시대로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안을 총체적으로 지지하는 노선을 따랐는데, 이로 말미암아 군민들로부터 ‘다소간 반감’을 사기도 했다는 것이다. 위 자료에 따르면, 당시 부여군 청년동맹은 미군정의 압박으로 지하활동만 겨우 가능한 상태였으며, 농민조합도 ‘표면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표 9〉 부여군의 좌익계 정당·사회단체 현황

단체명	회원수	소재지	주요간부	연령	학력 및 경력
부여군 인민위원회	다수	규암면	위원장 李戶喆		일본대 정경과 중퇴
			부위원장 趙榮九		
			간부 宋義淳		
			간부 金潤會		
부여청년동맹	300명	규암면	회장 玄忠得		중학졸업, 정미소경영
			부회장 李万基		중학졸업
			간부 金鍾万		
			간부 鄭泰淳		
			간부 金在惠		
			간부 許植		
부여군농민조합	각면 대부분	규암면	위원장 閔泳會		
			부위원장 尹正大		
			총부부장 李祐植		
			간부 宋完成		

## 『忠南地域特別調査報告書』(1945. 3)[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 1996 『美軍CIC情報報告書(Ⅰ)』 所收] 참조 작성.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참여자는 송의순(宋義淳), 조영구(趙榮九), 이호철(李戶喆) 등이었다.

일제시기 부여군 내에서 좌익세가 가장 강력했던 마을은, 장암면 장하리(주요지도자: 강성구, 강일구 등),<sup>114)</sup> 홍산면 조현리(주요 지도자: 이호철, 조병

순 등),<sup>115)</sup> 규암면 합송리(노명우, 오기영, 장창선 등), 부여면 중정리(유기섭, 유인성, 유인철, 최상은) 등이었다. 이들 마을은 공통적으로 혁신청년 주도의 야학운동이 활발했던 곳이었다. 일제시기 부여군에는 18개(실재는 더 많았을 것이다)의 크고 작은 야학이 존재했는데, 이를 주도했던 혁신청년들은 전시총동원정책이 실시되는 상황 속에서도, 경조사 참여 등 다양한 ‘관계 맺기’를 통해서 ‘해방’ 무렵까지 자신들 나름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회고에 따르면, 해방 공간에서 맹활약한 좌익청년들은 대부분 야학교사(지도자)였던 혁신청년들과 ‘사제관계’를 맺었던 이들이었다고 한다.<sup>116)</sup> 이런 사정은 논산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표 10〉 논산군의 좌익계 정당·사회단체 현황

단체명	회원수	소재지	주요간부	연령	학력 및 경력
논산인민위 원회		논산읍	위원장 尹希重	45	한학, 지주
			부위원장 徐鴻善	44	중학, 前군산부회의원
			부위원장 尹漢炳	40	한학, 약종상
			총무부장 趙東珣	41	한학, 양조업

- 114) 반제격문사건과 화성당 사건에 연루된 바 있는 강성구(姜星求) △ 야학교사로서 부여지역 사회운동에 적극 가담한 강일구(姜日求)와 최재봉(崔在鳳), 그리고 △ 칠모회의 나머지 멤버인 강병국(姜秉國), 강성모(姜聖模), 강계구(姜桂求), 강병욱(姜秉郁), 강병환(姜秉煥) 등이었다. 게다가 혐의회사건의 주모자격인 이호철(강석기의 셋째아들인 姜鎔求의 제자)을 비롯하여, 같은 사건으로 검거된 노명우, 강석갑과 이동석 등도 강석기나 강철구의 영향하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장암마을의 민족·민중운동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필자가 집필한 『부여군지』 이외에 장세욱, 1997 『일제하 부여지역 동족마을의 농민운동 연구 —부여 장정마을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참조할 것.
- 115) 혐의회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54명의 청년들 가운데 조현리 출신자가 무려 30명이나 되었다. 검거 당시 마을 장정들이 없어 조현리는 거의 폐농 지경이었다고 한다. 이호철은 혐의회 사건 직후 전향했는데, 이는 일종의 ‘위장술’이었다고 한다. 대중교운동에도 깊이 관여했던 이호철은 제현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으나 한국전쟁 직후에 실시된 지방자치 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되었다.
- 116) 줄고, 1990 『일제하 함안지역의 민중운동』, 『민족지평』 2호, 참조. 함안지역의 중심 활동가였던 안창준씨의 회고에 따르면, 인민위원회, 농민조합, 청년동맹 등에서 활동한 젊은이들은 대부분 함안농조 조합원이었거나 농조에서 운영했던 동리 야학의 학생들이었다고 한다(위의 논문, 228면 참조).

			조직부장 金寅鎭	32	소학, 공산주의자
			선전부장 裴榮喆	40	중학, 前忠盟團 상무이사, 잡지 『내선일체』 기자
논산읍인민위원회		논산읍	위원장 郭海鳳	45	전문학교, 의사
			부위원장 朴順哲	38	소학, 전기회사 수금원
			총무부장 金鍾喆	47	한학, 前중선일보 지국장
			선전부장 兪萬瀋	35	중학, 중선임업회사 사원
논산읍합동노동조합	60	논산읍	조합장 朴鍾夏	45	농업, 중학졸
			부조합장 高興三	63	소학, 驛什長
			총무부장 朴長吉		사임
			선전부장 羅承斗	27	중학, 前순사
			조직부장 李奎先	43	소학, 인쇄직공
논산농민조합	각면 대부분	논산읍	조합장 趙重滾	41	소학, 공산주의자
			부조합장 黃益善	41	소학, 농업
			총무부장 李判金	38	한학, 농업
			조직부장 張宗鉉	42	소학, 농업
			선전부장 趙漢哲	36	중학, 무직
논산청년동맹		논산읍	위원장 崔元洛	37	중학, 만주 진출 회사원
			총무부장 黃甫益	28	소학, 농업
			선전부장 朴鳳鵬	34	소학, 농업
			조직부장 黃圭煥	31	소학, 무직
논산부녀동맹		논산읍	위원장 鄭玉景	38	소학, 산과
			총무부장 南珍熙	40	소학, 산과
			교화부장 徐杉	32	소학, 산과
			조직부장 朴南紅	30	소학, 가정부인
			선전부장 朴敦順	29	소학, 가정부인
논산응징사동맹	30	논산읍	위원장 沈宜淳	48	소학, 한학, 군청
			부위원장 池判永	32	소학, 점원
			부위원장 金鍾文	33	소학, 과자상
			총무부장 姜鎬錫	34	소학, 상업
			조직부장 黃一成	40	소학, 무직
			선전부장 姜孟熙	35	소학, 상업
논산국군준	40	논산읍	위원장 趙東珣	41	한학, 양조업

비대		부위원장 郭海鳳	45	전문학교, 의사, 공산주의자
		총무부장 朴鳳鵬	34	소학, 농업
		조직부장 鄭樂信	35	중학, 무직

# 『忠南地域特別調查報告書』(1945. 3)[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 1996 『美軍CIC情報報告書(Ⅰ)』所收] 참조 작성. △ 전국인민위원회대표자대회 참여자는 徐鴻善, 徐好善, 趙東珣 △ 전국농민조합총연맹 결성대회 참여자는 張宗鉉, 黃益善, 金翊洙 △ 충남도인민위원회 참여자는 權寧珉, 愼杓晟, 趙重滾 등이었다.

논산군 인민위원회는 1945년 10월경 '군청 접수'를 시도하는 등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논산지역의 혁신청년인 權寧珉, 愼杓晟,<sup>117)</sup> 趙重滾<sup>118)</sup> 등은 도 단위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sup>119)</sup> 논산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尹希重(1930년대 초반, 논 271정보, 말 38정보, 기타 27정보 소유)<sup>120)</sup>은 일제시기 조선중앙일보 전무역을 수행하기도 한 인물로서, 조동순(초대 논

117) 신표성은 1920년대 초반부터 서울청년회, 경성노동회, 전진회 등에 관계한 인물로서 1925년 1월 군산청년회, 군산노동연맹회 등이 주최한 '레닌 추도 강연회'에서 『조선 농촌에서 본 레닌』이라는 강연을 했을 정도로 나름대로 이론적 수준이 있는 맑스레닌주의자였다. 신표성은 1926년 2월경부터 조선공산당 대전야채이카의 책임자로 활동하다가 1928년 2월 제4차 조선공산당사건, 1932년 6월 양촌면 적기 시위사건으로 검거 투옥되기도 했다. 신표성은 1944년 건국동맹 충남북지부 책임자로 활동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충남도인민위원회(부위원장), 민주주의민족전선(중앙위원, 충남지부 기획부장) 등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남로당 간부로 활동하다가 1947년 10월 체포되어 취조를 받던 중 사망했다.

118) 조중근은 일본유학(日本大) 이후 1927년 조선공산당에 입당한 뒤, 『제3전선』 편집위원,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KAPF) 중앙집행위원, 신간회 동경지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다가 1928년 제4차 조선공산당사건 때 검거되어 실형을 살았다(1930년 3월 출옥). 해방 이후 충남도 인민위원회, 전국농민조합총연맹 충남도 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1948년 8월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제1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19) 회고에 따르면, 한국전쟁 시기까지 공주를 포함한 충남 남부지역 좌익운동의 중심지는 '논산', 특히 양촌면과 성동면이었다고 한다. 양촌면은 일제시기부터 혁신청년운동(적기시위 및 소작계사건 발원지)이 강력했던 곳이었다.

120) 윤희중은 일제시기 조선중앙일보의 전무를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여운형계 인물이었다고 한다) 이문당, 논산곡자회사, 동아상사, 주식회사 삼환 등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기도 했다. 일제시기 尹希重은 趙東珣과 함께 자기 집에 노동야학회를 설립하기도 했다(『조선일보』, 1923. 10. 16). 「長安 甲富 秋收 調査」(『삼천리』 제8권, 1936. 1)라는 글에 따르면, 1936년 당시 경성에 거주했던 윤희중의 소자료 수입은 대략 1200석 정도였다고 한다.

산군 인민위원회 위원장),<sup>121)</sup> 신표성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이었다. 당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서홍선은 일제 말기 가야곡면 면장(군산부협의원) 등을 역임한 인물로서, ‘군청 접수’를 진두지휘하는 등의 활약상을 보였다고 한다. 논산군의 좌익계 정치활동을 지도한 또다른 지도자는 논산읍 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곽해봉이었다. 곽해봉은 논산 출신은 아니었으나 1930년대 초반 논산읍에 병원(천성당병원)을 설립한 후, 딱한 처지의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등 상당한 인심을 얻은 인물이었다.<sup>122)</sup> 양촌면과 더불어 논산의 ‘모스크바’라 불렸던 성동면의 주요 활동가는, 일제시기부터 조동순, 신표성 등과 동지적 관계를 맺고 있었던 소철영(성동농민회 간부),<sup>123)</sup> 소진봉(야학 활동),<sup>123)</sup> 조남석(사상정화 대상자) 등이었다.<sup>125)</sup>

앞의 『충남정세조사보고』에 따르면 논산군 인민위원회는, “행동이 대체적으로 불순하고 노동조합, 농민조합과 협력하여 일반인에게 테러를 쓰고, 각면을 돌아다니며 소작료를 3·7제로 해야 한다는 등 소작인을 선동”하는 활동을 전개했다고 한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위의 자료에 보이는, “幹部의 思想은 別로 無하고, 帝國主義下에 親日派들이 大部分임. 其中 共產主義者가 何人 있음”이라는 대목이다. 물론 초기 시기 좌익계 단체 간부들 가운데는 일제시기 ‘공직자’(예를 들면 서홍선)나 이른바 ‘정치 건달’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하

121) 회고에 따르면, 초대 논산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조동순은 윤희중과 처남매부간이었으며, 신표성은 그와 동문 수학(대전 기성면 평촌리 이현산의 훈학)한 사이였다고 한다.

122) 곽해봉은 전쟁시기 입산투쟁을 하다 체포되어 사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회고에 따르면, 그가 체포되어 논산으로 끌려왔을 때, 많은 이들이 그의 처지를 동정하여 선처를 호소하였다고 한다.

123) 『중외일보』 1927, 11. 4. 蘇喆永(혜화전문 출신)은 일제시기 자신의 고향(성동면 개척리)에서 농민회와 야학을 조직하는 활동을 전개했다(『동아일보』, 1929, 1. 12).

124) 소진봉은 소철영과 당질간이다. 소진봉은 조중곤의 뒤를 이어 논산군 농민조합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전쟁 후 두 아들과 함께 월북했다고 한다.

125) 성동면 개척리 출신 대지주 趙煥九(1932년 현재 132정보 소유, 면장 역임)는 일제시기 집안 청년 교육을 위해 家塾(소두형의 훈학)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동네의 무산아동 교육을 위해 ‘성동면 학원(1928)’을 설립하기도 했다. 성동면 개척리 출신의 좌익 활동가들은 대부분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성장한 진주 소씨와 풍양 조씨의 청년들이었다.

지만 이는 '통일(연합)전선'을 중시하던 시기의 과도적 현상에 불과하였다. 회고에 따르면, 조동순, 조중근, 곽해봉, 소진봉 등은 전쟁 직전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각종 지하 활동(군당 활동)을 지도했다고 한다.

## 6. 맺음말

본 논문에서 필자가 논증하고자 한 것은 대체로 세 가지였다. 첫째는 일제하의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의 분화과정과 존재양태를 밝히는 것, 둘째는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의 정치적 계선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 셋째는 해방공간의 정치활동 과정에서 양 집단이 각자 어떠한 정치활동을 전개했는가를 밝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앞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세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한 필자 나름의 결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초기청년운동의 주체인 '유지청년'들은 창립 시기부터 총독부권력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총독부권력으로부터 '郡民 代表' 자격을 부여받기도 했다. '유지청년'과 '혁신청년' 사이에 정치적 계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중반 무렵부터였다. 이때부터 상당수의 유지청년들은 군면 단위 '관료-유지 지배체제'를 매개로 활발한 공적활동을 전개했으며, 혁신청년들은 그와는 반대로 청년총동맹, 농민총동맹과 같은 전국 규모 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지역사회운동을 주도하였다. 특히 1930년대 초반 신간회(삼총) 해소투쟁을 경과하면서, 양 집단은 여러 사안을 둘러싸고 뚜렷한 정치적 입장 차이를 보였다.

둘째,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의 정치적 계선은, 소작쟁의나 조직 농민운동, 각종 민원·진정 활동, 사상선도 활동 과정에서 더욱 극명히 드러났다. 특히 소작쟁의와 조직 농민운동은 양 집단 사이에 존재한 정치적 계선의 실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양 집단 사이에 존재한 정치적 계선은 군면 단위 '관료-유지 지배체제'를 매개로 실행된 사상선도 활동을 통해서도 그 실상을 엿볼 수 있다. 상당수의 농가개생 성공사례가 유지들의 선처와 후원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듯이, 사상선도 활동도 유지들의 참여와 후원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셋째,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은 해방공간에서도 서로 다른 정치노선을 걸었다. 즉 일제시기의 유지집단은 우익(독축)계 단체의 중심역할을 담당했음에 반해, 혁신청년집단은 좌익계 단체의 중심역할을 수행했다. 해방 직후 시기 양 집단이 일시적으로 연대한 사례도 없지 않으나, 이들 사이에 존재한 정치적 계선은 '찬반탁 정국'을 경과하면서 더욱더 극명한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농지개혁과 한국전쟁을 경과하면서 양 집단 사이에 존재했던 정치적 계선은 현실 정치적인 의미를 상실한 채 급속히 소멸되고 말았다. 부여 논산 지역의 좌익활동가들은 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 사망했거나 월북했다고 한다.

최근 '이항대립적 역사인식' 극복을 표방하며 기존의 日帝時代史像을 해체하려는 시도가 한창이다. 이른바 '협력론', '식민지 공공성론', '식민지 근대성론'(식민지조합주의론) 등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대표적인 '담론'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역편향을 경계하지 않는 경우, 이같은 담론들은 일제시대사 인식을 온통 잿빛으로 만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런 잿빛 인식이 횡행할 경우, 친일파 청산은 물론이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실천의 방향도 애매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면 '直의 원칙'에 근거한 褒貶이 마땅히 실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은 '진보에 대한 막연한 신념'보다 '정의에 대한 믿음'을 통해 더 탄실히 싹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sup>125)</sup>

(필자: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주제어: 관료-유지 지배체제, 유지집단, 혁신청년집단

투고일(2005.11.10), 심사시작일(2005.11.14), 심사종료일(2005.11.23)

126) 줄고, 2005 『(시론) 과거는 짐이자 힘이다』 『역사와 현실』57 참조.

## 참 고 문 헌

- 『東亞日報』(1920-1940), 『中外日報』(1926-1931), 『中央日報』(1931-1933), 『朝鮮中央日報』(1933-1936).
- 藤村徳一, 『朝鮮公職者名鑑』, 朝鮮圖書刊行會, 1927.
- 『忠清南道道勢一斑』 各年版(1928, 1933, 1935, 1936, 1937, 1938).
- 『忠南道下の思想概況竝同道論山・夫餘・青陽・禮山及唐津郡各思想善導機關の活動狀況』[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思想彙報』 第9號 (昭和十一年 十二月)].
- 『忠南地域特別調査報告書』(1945. 3)[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 편, 『美軍CIC情報報告書(Ⅰ)』 1996, 所收].
- 並木真人, 1993 『植民地期朝鮮人の政治参加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31.
- 金翼漢, 1996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地方支配體制の構築過程と農村社會變動』, 東京大學校大學院人文社會系研究科東アジア歴史社會専門分野 博士學位論文.
- 최봉대, 1998 『농지개혁 이후 농촌사회의 정치적 지배집단의 형성 —1950년대 경기도 용인군 관내 면의원 및 면장 충원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 松本武祝, 1998 『植民地權力と朝鮮農民』 社會評論社.
- 辻洪範, 1999 『植民地期實力養成運動における連続と轉換 — 載寧青年會幹部の地域有力者層による活動(1920-1927)』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第37號.
- 신기욱, 2001 『식민지의 사회운동과 역사변동』 석현호·유석춘 공편, 『현대 한국사회성격논쟁 —식민지, 계급, 인격윤리』, 전통과 현대.
- 鄭然泰, 2003 『조선말 일제하 자산가형 지방유지의 성장추구와 이해관계의 중층성』 『韓國文化』31호.
- 부여군지편찬위원회, 2003 『부여의 역사』.
- 板垣龍太, 2003 『植民地期朝鮮の地域社會における〈有志〉の動向 -慶北尙州の支配構造の變容と持續』 『東アジア近代史』 第6號.
- 김영희, 2003 『일제시대 농촌통제정책 연구』, 경인문화사.

- 윤해동, 2003 「식민지 인식의 회색지대 —일제하 공공성과 규율권력」 『(한국  
의 근대성과 식민주의 비판) 식민지의 회색지대』, 역사비평사.
- 김동명, 2004 「이념과 현실 —조선인과 일본인의 관료복무」, 한일관계사연구논  
집 편찬위원회 편,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삶과 민족운동』, 경인문화사.
- 정연태, 2005 「日帝の地域支配・開發と植民地的近代性 — 浦口商業都市江景地  
域の事例」, 宮嶋博史・金容德 編, 『近代交流史と相互認識Ⅱ 一日帝支配期』,  
慶應義塾大學出版會.
- 松本武祝, 2005 『朝鮮農村の〈植民地近代〉經驗』, 社會評論社.
- 논산시지편찬위원회, 『논산의 역사』(발간 예정).

<Abstract>

## A Study on the Local Power Elite Groups and the Reformist Youth Groups in Buyeo County and Nonsan County in the Period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Ji, Soo-gol\*

This study aims at three objectives: First, it examines and describes the existence and diversification of the local power elite groups and the reformist youth group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Second, it shows clearly the political boundary between the local power elite groups and the reformist youth groups. Third, it describes what political activities the both groups were engaged in after the liberation. I examined the cases found in Buyeo County and Nonsan County, and reached at four conclusions. First, the local power elite groups and the reformist youth groups began to divide in their political orientation significantly after a series of “reformist (or progressive) movements” by the youth groups in the mid 1920s. Second, a strong antagonistic relations between two groups developed through the early phase of “the *Singanhoi* (*Samchong*) dissolution struggle” (“revolutionary mass organizing movement”). Third, their political differences and demarcations can be clearly found in their activities, such as peasant tenants struggles, organized peasant movement, petition movements, and “thought leading”

---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Gongju University

activities-ideological propaganda activities. Fourth, after the liberation, the local power elite groups led the rightist political activities and the reformist youth groups led the leftist political activities.

Key Words : bureaucrats-local elites ruling system, reformist movement  
by youth groups, reformist youth groups